

04 • 권두언

충남발전의 새로운 100년을 향한 길 | 박양호

06 • 특집 | 환황해권시대, 충남의 발전전략과 대응 방안

환황해권 시대, 서해안권의 과제와 발전방향

| 한상욱, 오용준

환황해권 시대, 충남 물류산업의 여건 변화와

대응과제 | 임영태

환황해권 시대, 충남 서해안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지속가능성 | 김경태

28 • 충남논단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정책 연구 | 윤정미, 김정하

충청남도 물 복지 향상을 위한 소규모수도시설의 효율

적인 운영·관리방안 | 김영일

충청남도 하천관리를 위한 도랑살리기의 필요성

| 김홍수

49 • 충남 마을 기행

인정 넘치고 아름다운 충남의 알프스, 칠갑산 산꽃마을

| 정봉희

54 • 열린마당

내포문화 콘텐츠 구축에 관한 단상 | 오석민

61 • 해외리포트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자립마을 삼쇠섬

(Samsø Island) | 이인희

66 • 오피니언

갑을 관계, 나도 올이다 | 이도희

68 • 충남 소식

70 • 연구원 소식

73 • 충남 문화유산

김이교 유물 일괄

충남발전의 새로운 100년을 향한 길

박양호 | 전 국토연구원장, 도시재생네트워크 공동대표



충남도청의 새로운 등지인 내포신도시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다. 내포신도시는 충남의 미래개척측면에서 여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도청의 이전이라는 단순한 공간적 변혁을 뛰어넘어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충남 도민의 원대한 꿈이 담겨있다.

도민을 위한 첨단행정의 산실이며 창조경제의 거점이자 충남의 연안지역과 내륙지역의 통합되고 균형된 발전과 행복한 생활권의 중심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하는 도민의 염원이 담겨있다. 나아가 앞으로 본격 전개될 환황해권시대와 한반도 새문명 시대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도청이전의 새역사가 충남의 대도약을 향한 도민의 개척과 전진노력에 역사적 디딤돌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충남도청의 새로운 공간인 내포신도시의 개발은 대내외 여건의 변환기에 추진되고 있다. 2020년 세계경제의 피크를 향한 세계경제의 사이클이 힘을 발휘하고 있고 그 흐름 속에서 새로운 원동력인 정보통신산업과 바이오와 에너지산업, 그리고 문화와 콘텐츠 산업이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창조경제의 핵심인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이 산업의 혁신을 가져오는 원천으로 중시되고 있다. 더욱이 세계경제의 수퍼파워인 중국의 비약적 성장으로 환황해경제권이 본격 전개되는 시점에 내포신도시가 출범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지방으로의 인구유출이 가시화되어 인구의 지방화 추이가 나타나고 세종시의 출발과 안정적 발전이 기대되는 시점이다. 나아가 국민행복 제감형 지역발전이 새로운 지역발전패러다임으로 중요시되는 시기에 내포신도시가 개발되고 있다는 점으로 봐서 충남도청이전이 역사적 흐름에 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충남도청의 이전은 향후 100년을 내다볼 때 충남이 보유한 잠재력을 발휘할 절호의 기회를 만들고 있다. 충남의 인구가 200만명을 훌쩍 넘어섰고 인구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충남의 매력이 증강될 수 있는 기회가 집적되어 있다. 세계경제의 용광로, 중국과 근접한 서해안의 중앙지대이며 수도권과 세종시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다. 창조경

제의 자산도 풍요롭다. 연구개발특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바이오산업의 경쟁력도 연계될 수 있어 창조경제 네트워크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부여와 공주 등 백제의 고도(古都)를 포함한 백제문화권과 내포문화권, 기호유교문화권도 조화롭게 발전될 수 있다. 아름다운 산-강-바다를 잇는 자연생태자원도 충남에는 풍요롭다.

충남도청의 새로운 등지인 내포신도시 개발을 계기로, 그리고 충남에 다가오는 새로운 경제사회적 조류와 충남의 역동적 잠재력을 살려 향후 충남이 어떻게 발전해야 할 지를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 힘을 합쳐 실천해야 할 것이다. 향후 100년 앞을 내다보며 충남발전의 새로운 길을 정립하기 위한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4신(新) 전략을 미래 충남의 이정표이자 발전전략으로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충남발전의 ‘4新’이란 ‘新성장’(New Growth), ‘新글로벌’(New Global), ‘新문화관광’(New Culture-Tourism), ‘新삶의 질’(New Quality of Life)이다.

첫째, 충남의 新성장을 위해 충남전역의 ‘창조경제밸리’ 구축이 필요하다. 주요 핵심산업지대와 신산업지구를 창조경제의 중심지로 만들고 특히 정보통신기술산업, 바이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미래 창조경제루트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 충남 서해안지역으로부터 내포신도시, 부여, 공주, 천안,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세종시, 충북 오송지역 등으로 고도로 연계되는 창조경제루트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 이와 연계해 충청권의 중추도시권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동시에 거점지역과의 공동협업체제가 필요하다. 둘째, 충남의 新글로벌을 위해서는 환황해경제권의 글로벌 물류기지로써 평택-당진항을 연계메가포트로 개발하고 한중간 생산 물류 협력단지 개발 및 네트워크화가 요구된다. 농어업의 6차산업화를 통해 고부가가치화하고 경제자유구역의 내실화와 충남 글로벌 창조경제엑스포 구상의 추진도 필요하다. 셋째, 충남의 新문화관광을 위해서는 백제문화벨트의 개발을 위해 백제문화의 복원, 보존, 재현이 요구된다. 내포문화권과 기호유교문화권의 새로운 개발이 백제문화권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그리고 태안반도-다도해-어촌지역 등을 중심으로 국제해양관광벨트를 구축하고 충남의 산-강-바다를 연계하여 독특한 ‘힐링 회랑’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충남의 新삶의 질을 위해서는 충남형 ‘행복생활권’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 주민 실생활권역을 ‘행복생활권’으로 규정하고 주민 실생활에 필요한 기본수요인 일자리, 의료, 교육과 보육, 주거 복지, 대중교통, 안전 등의 주민행복기반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도시재생정책과 연계 추진할 때 시너지효과도 날 것이다.

향후 충남은 세계를 향한 새로운 문명을 잉태하고 전파하는 ‘창조국토’의 선도지역으로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충남 도민과 지자체와 대학, 기업, 중앙정부간 고도의 협업은 필수이다. 새로운 충남도청의 출범이 충남전체 발전, 충남도민의 행복, 충남인근지역과 공동발전, 나아가 동북아변영 전진기지의 도약대가 되길 기원한다.

환황해권 시대, 서해안권의 과제와 발전방향

한상욱, 오용준 | 충남발전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 연구위원

충남도청이 1896년 조선시대의 건도 이래 공주-대전시대를 거쳐서 올초에 다시 충청남도로 돌아왔다. 이로 인하여 충청남도의 새로운 발전방향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다.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환황해권의 중심지”라는 용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환황해권이 갖는 의미와 해석은 접하는 이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지역발전 측면에서는 국토계획상 대한민국의 산업발전축이었던 경부축에서 벗어나 서해안축으로 이동하였다는 데에 그 의미를 둘 수 있다. 더불어 충청남도는 서해안시대, 환황해권시대, 크게는 전세계 경제를 이끄는 아시아시대를 맞이하여 충청남도의 비전을 밝힘으로서 그 역할과 입장정리를 요구받고 있다.

국가에서는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서해안시대의 전개를 예견하고, 국가 시책사업으로 서해안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한 것이 1990년이다. 서해안시대는 적어도 1980년대 이전부터 사용해왔던 용어인 것이다. 서해안시대의 전개와 더불어 충청남도는 무엇을 준비하였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 당시에는 도청이 정부발전축상의 대전에 위치하였고, 서해안시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전략 마련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서해안권의 특색있는 방향제시에 대한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도청이전에 대한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한 담론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서해안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나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내포시대를 맞이한 충청남도가 환황해권·서해안권시대에 따른 주변국·주변지역의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충청남도만의 특색있는 발전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대응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국적 차원의 서해안권 여건 및 발전 방향

우리나라에서 서해안권이라고 하면, 인천광역시(8개 구·군), 경기도(6개 시), 충청남도(7개 시·군), 전라북도(4개 시·군)를 말한다.¹⁾ 서해안권은 중국 동부지역과 수도권이 교차하는 환황해권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본·중국 등 3억명의 배후시장을 보유하는 등 입지특성상 중국과 마주하는 전략적 요충지

1) 우리나라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에 근거한 서해안권발전 종합계획의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서해안권은 중국의 산업화·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세계의 3대 경제권²⁾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북경 대도시권, 서울 대도시권, 동경 대도시권이 융합된 동북아 베세토(BeSeTo)³⁾ 대도시권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한·중·일간의 교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특히, 중국경제의 급성장 등으로 한·중간 교역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국가계획차원에서 동북아 경제권을 선도할 성장거점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의 경제권 계획⁴⁾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서해안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 서해안권의 잠재력을 요약하면,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서해안권의 경제자유구역 및 수도권 간의 연계 시너지효과로 글로벌 신산업 집적거점으로 성장하여 21세기 개방형 국토축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공항·항만·도로 등의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으로 첨단산업 집적기능과 글로벌 비즈니스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글로벌 네트워크 중심이 미국중심에서 환황해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신산업 경제네트워크의 거점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하며, 국가경제 및 환황해권 수출 거점지역으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연환경적 측면에서는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자원이 풍부한 리아스식해안으로 전국의 54%에 달하는 대규모 갯벌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비롯한 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기도 하다. 지역 향토문화, 계절별 특산물, 향토음식 등을 활용한 세계적인 관광 명소화의 추진여건이 양호한 지역이다. 이를 기반으로 우수한 농수산 식품원료와 발효 가공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어서 세계적인 식품을 육성시키기 위한 여건도 충분하다.

최근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서는 서해안권의 역할을 글로벌 경제의 관문이자 환황해권의 허브, 지식과 기술이 융합된 녹색성장의 교두보로서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견인차, 사람과 문화, 지식과 정보 및 자본의 융합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비전은 환황해 경제권을 주도하는 지식·첨단산업의 융복합벨트, 목표를 지식과 기술이 융합된 첨단산업의 거점, 글로벌 경제의 관문이자 환황해권의 네트워크 허브로, 추진전략을 국제비즈니스 거점 및 환황해 협력체계 조성, 초일류 첨단산업벨트 구축, 글로벌해양생태·문화 관광벨트 조성, 역내외 인프라 구축으로 제시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서해안권 주요 내용

충청남도 서해안권(7개 시·군)⁵⁾의 인구는 충청남도의 90.3만명으로 충청남도의 44.7%, GRDP는 44조 8,551억원으로 충청남도의 58.7%, 제조업체수는 1,434개소로 충청남도의 43.5%를 차지하는 곳이고, 항

2) 세계의 3대 경제권은 동북아경제권, EU, NAFTA를 일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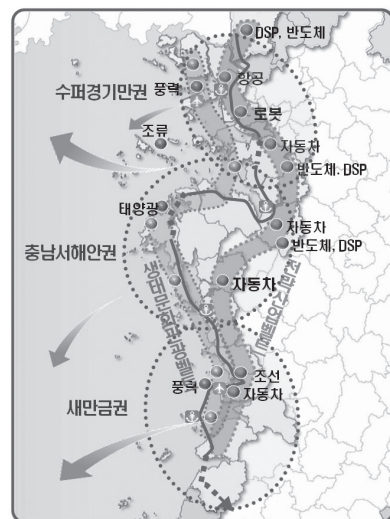
3) 베세토(BESETO)는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의 경제·문화권을 말하며, 베이징(Beijing)의 BE, 서울(Seoul)의 SE, 도쿄(Tokyo)의 TO를 따온 것을 말한다.

4) 중국은 환황해권을 중국경제의 중심축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환발해경제권, 장강 델타 경제권, 해협 서해안 경제권, 주강 델타 경제권, 환북부 연안경제권을 계획하고 있으며, 일본은 1축 1극형 국토계획에서 다축형으로 국토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만물동량과 연안습지는 각각 104,948천RT, 358.8km²를 모두 수행하는 지역이다.⁶⁾

충청남도의 서해안권은 수도권·대전권과 접근성이 우수하고, 우수한 역사·문화·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택·당진항과 황해경제자유구역 등 직교류기반이 이미 구축되어 있다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대중국교역의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핵도시구조(연담화)로 인한 지역 불균형의 심화, 관광자원은 많으나 이를 연계개발 및 고부가가치화라는 측면에서의 미흡, 고급인력의 정착기반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보완해야 할 사항이다. 최근 들어 대전 등 과학벨트 조성이 가시화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의 창출이 향후 가능하다는 전망과, 새정부의 지방중추도시권 발전정책의 추진 등은 서해안권의 발전호기로 작용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국가계획인 서해안권발전 종합계획에 대응하고, 충청남도만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아직은 그 발전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만, 2030년의 미래상은 글로벌 수도권과 연계를 강화하고, 광역교통망의 확충으로 인하여 경제·산업적 측면에서는 신성장동력 창출과 순환형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첨단녹색산업 발굴과 소프트 파워강화를 위한 기반조성으로 서해안권 특성화 클러스터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으며, 관광적 측면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어촌 체험 및 생태관광확산을 위한 다지역 관광협력체계 구축을, 그리고 공간구조적 측면에서는 서해안권 지역과 이를 지원하는 내포신도시의 특성화된 발전전략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시·군별 기능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그림 1〉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의 공간발전 구상

〈표 1〉 충청남도 서해안권의 발전 기능

구 분	보 령	아 산	서 산	당 진	서 천	홍 성	태 안
국가 국제 기능	해양관광	첨단산업	기간산업	물류항만	생태산업	첨단산업	국제관광
광역기능	첨단산업	KTX역세권	물류항만	기간산업	생태관광	광역행정	녹색산업

계획과제 및 발전방향

현재까지 서해안권 중심의 계획이나 구상은 내용적 측면에서 서해안에 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산

5) 서해안권에 속하는 7개 시·군은 북쪽부터 아산, 당진, 서산, 태안, 홍성, 보령, 서천을 말한다

6) 충남 서해안권 발전방안 워크숍(2013), 충남발전연구원.을 요약 정리

업·경제, 관광부문에 대한 기능만이 부각되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한 방향설정과 더불어 서해안의 자원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그 파급효과를 내륙으로 유인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마련이 미흡하다는 한계를 갖는다. 달리 말하면, 대상이 내륙부에 집중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서해안(해양)과 연안(도서)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서해안을 둘러싼 패러다임의 변화와 더불어 담론으로 형성되고 있는 주요 내용은 중국의 성장, 기후변화의 적응(녹색성장)과 지속가능성의 담보, 사회통합성의 증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거시적 측면에서 충청남도의 서해안이 갖는 위상을 검토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서해안권이 갖는 위상이다. 서해안은 국제적인 관점에서는 해상교역의 관문이자 선진외국 문물 전래지인 내포와 국제해상왕국으로서의 백제를 중심으로 서해안 시대의 국제관문(Global Gateway)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충청남도는 크게 차령산맥을 기준으로 남측은 금강유역 중심의 삼국시대 백제문화, 조선시대 기호유교문화가 형성되었던 지역이고, 차령산맥 이북은 내포문화가 형성되었던 지역이다.⁷⁾ 이 내포문화-통상적으로 내포문화권이라고 일컬어지는 지역이 현재의 서해안권과 일치한다. 내포문화는 과거 해안을 따라 내륙 깊숙이 들어오는 포구를 중심으로 중국 등의 외부 선진문물이 유입되고, 내륙의 농경문화와 결합되면서 고유한 서민문화·층의(절의)문화를 형성한 지역으로 개방형 지역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지난 반세기동안 경부축 중심의 폐쇄적 국토구조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해양개방축을 형성하는데, 서해안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내포문화의 본질은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있다.

또한, 서해안을 중심으로 대중국의 개방형 체제를 형성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최적의 거점인 내포신도시가 충남 서북부발전지역의 효과를 낙후된 남부지역에 전달해주는 혁신거점, 균형발전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이다. 국토공간상 내륙중심으로 형성된 경부축, 급부상하고 있는 세종시와 서해안축을 매개하는 역할을 내포신도시가 담당할 것이고, 그 파급효과는 충청남도 전체로 파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거시적 측면의 위상과 더불어 앞으로 추진해야 할 서해안지역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기존 방향의 확대·보완 및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던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북아 해운·항만 여건변화에 대응한 전략적인 항만기능의 확충과 복합해양관광 공간의 창출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형성되어온 개발계획에 대한 지속·확대이다. 거시적 여건변화 측면에서 동북아의 선박대형화에 따른 기항지 축소, 동북아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 GTO점유율 확대 등과 연계하여 동북아의 항만간 경쟁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⁸⁾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항만정책의 패러다임도 변화⁹⁾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배후단지 등 지원시설의 집중, 항만내 신재생에너지 단지 건설, 복합해양관광공간의 창출이다.

7) 충청남도의 백제문화와 내포문화의 특성은 차이가 있다. 백제문화는 왕족문화, 귀족문화로 특징지워지며, 내포문화는 서민문화, 층의(절의)문화로 특징지워진다.

8) 일본, 한국, 중국의 부상으로 동북아에서 3개국의 물동량은 전세계 물동량의 37.9%를 기록하는 등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동북아 지역의 항만물동량은 1999-2010년 동안 연평균 9%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가활동의 변화는 1만 달러를 넘어서는 국가에서는 자동차, 쇼핑 등의 취미생활을 즐기게 되고, 2만 달러 이상의 소득에서는 윈드서핑, 수상스키, 요트 등의 취미생활이 일반화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여가시간 활용의 변화와 함께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생활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사람들은 수변으로 모여 들게 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하는 공통적인 생활패턴을 보인다.

중국의 소득수준 향상 등과 연계하여 국제 크루즈를 통한 국내입항 여객수의 지속적인 증가⁹⁾가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충청남도의 전방위적인 관광객 유치에 필요로 한다. 또한 이러한 향만은 국가산업 고도화, 소득수준 상승 등으로 물류 흐름상 육상과 해상을 연결하는 전통적 항만기능의 다양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항만배후단지와 클러스터를 포함한 친환경·고품격 워터프론트 항만개발이 필요하다. 기존의 항만클러스터, 물류 클러스터 등에서 탈피한 Port Business Valley로, 주민들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하며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재창출할 수 있는 항만개발의 요구가 증가할 것이다. 그 대상으로는 항만재개발에 포함된 대천항, 제1차 마리나항만기본계획(2010-2019)에 포함된 석문, 오천, 홍원, 보령 항¹⁰⁾에 대한 잠재력 검토와 다양한 형태의 기능을 수렴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

둘째, 해양은 아직까지 전략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새로운 영역이자 미개척지이다. 해양생태산업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해양생태산업¹²⁾은 생소한 분야로 남아있고, 해외의 생태산업은 EU·미국을 중심으로 빠르고 잠재력이 높은 신성장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 비전을 설정한 이후 해양생태계복원, 바다숲 등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불어서 해양생태산업이 포함될 것으로 추정되는 건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도 발달하지 않고 있다.¹³⁾ 우리나라 연안해역 생태계가 제공하는 경제적 가치는 2010년 기준 GDP의 약 3%수준인 32조8억원-33조8,662억원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향후 녹색경제를 이끌 신성장동력으로서 해양생태산업은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성장가능성도 큰 블루오션이다.

셋째, 장기적으로 기후변화 적응에 대응하여 보전과 개발이 조화된 발전이 필요하고, 해양환경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응이 요구된다. 기상연구소의 중장기 기후변화 예측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011-2100

9) 대형컨테이너 위주 개발 한적 경쟁력 강화, 부두 위주의 항만개발·운영·배후수송망·배후단지 등 지원시설 집중, 소규모 해양관광 인프라 개발·해양신도시 등 적극적 재개발 추진, 제한적 항만재개발 사업 추진·고효율 탄소절감형 항만, 항만내 신재생에너지 단지 건설, 저효율 에너지 소비형 항만 복합 해양관광공간 창출로 요약된다.

10) 크루즈 전용부두 등 국내 항만내 관련 인프라 수요 증가가 전망되며, 2010년 크루즈 여객수는 17만5천명에서 2020년 28만5천명으로 증가할 전망이고, 국내 레저보트 수요는 2010년 7,232척에서 2019년에는 1만7,435척으로 증가 전망되고 있다.

11) 제1차 마리나항만기본계획상 보령·당진에 포함되었으나 운영은 되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 2010년 현재 기개발·개발중인 마리나는 기개발 11개소, 개발중 5개소로 총 16개소로 1,304척(수용가능척수 : 1,028)이다.

12) 해양생태산업은 광의의 관점과 협의의 관점으로 나눌 수 있으며, 광의의 관점에서는 생태산업 개념을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유럽생태산업/미국 EBI개념을 해양환경에 기계적으로 적용한 산업, 해양환경개선 및 생태계 보호와 관련한 포괄적 환경산업, 오염물질 유입, 오염 물질 제거, 자원재활용, 해양환경·생태모니터링, 환경영향조사, 생태계 환경복원을 주 내용으로 해역뿐만 아니라 연안구역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고, 협의의 관점은 해양생태계 및 공간으로 한정하여 해양생태계법 제정목적의 효과적 달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산업으로 한정한 산업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양공간에서 해양생태계의 기능과 가치를 유지·증진할 목적으로 해양생태계 및 그 구성요소인 해양생물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13) EU의 생태산업 매출액은 2008년 GDP의 2.5%에 해당하는 3,190억유로이며, 전체 매출액 중 오염관리 부문이 64%, 자원관리 부문이 36%를 차지하고, 미국의 생태산업 시장은 1970년 약 200억달러 규모에서 2010년 3,120억달러 규모로 성장하였고, 2020년에는 5,000억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매출액은 2009년 현재 44조64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환경사업체는 총 31,728개소, 환경분야 종사자는 195,587명이다.

년 기온은 꾸준히 상승하며, 강수량은 연간 변동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상승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한다¹⁴⁾. 이에 따라 해양환경과 어업환경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서해안은 최근 41년간(1968-2009) 약 1.31℃¹⁵⁾ 상승하였으며, 서해는 1.29℃의 상승하였다.

우리나라의 일부 지역 해수면 상승은 지구평균 3.1±.4mm/yr를 초과(제주해역 5.1mm/yr)하고 있으며, 연안은 지리적으로 해수면 상승과 기상이변의 직접적인 피해지역으로 전국 평균의 2.2배에 달하고, 연안 개발 및 기후변화 영향으로 방조제, 어항, 직립호안 등의 인공구조물 건설, 하구둑 조성에 따른 모래공급 원 감소, 연안표사계의 교란 등 연안의 침식피해가 증가¹⁶⁾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안선을 단순한 보호차원에서 연안의 질적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야 하며, 호안·제방·해안도로 등의 인공화된 해안선의 복원을 통해 연안의 자연성을 회복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¹⁷⁾(2008-2017, 해양수산부)은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매 10년마다 수립하는 중기계획으로 주요내용은 496,535백만원 투입 계획이었고, 최근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에 대한 밑그림을 다시 수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연안습지 및 하구 관리체제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현재 충청남도에는 금강호, 부사지구, 홍보지구, 서산AB지구, 대호지구 등이 있는데,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안과 내륙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충청남도의 해안과 내륙을 연결함으로써 개발의 파급효과를 내륙으로 유인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템즈강 하구관리계획(Thames Estuary 2100: TE2100)¹⁸⁾, 네덜란드 로테르담 Maeslantkering¹⁹⁾, 이탈리아 베니스 모세 프로젝트²⁰⁾ 등은 장기적으로 기후변화대응 및 수변도시 개발-지역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충청남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14) 한반도 기온과 강수량 변화예측

구분	2020년	2050년	2080년
온도증가()	+1.5	+3.0	+5.0
강수량변화(%)	+5.0	+7.0	+15.0
해수면 변화	2100년 50cm이상 상승		

주)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비교적 급격하게 증가하여 2100년에 농도가 820ppm이 되는 것을 가정

자료 : 김창길 외(2009),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부문 영향분석과 대응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국립식량과학원

15) 이는 전세계 평균 표층수온 상승률인 100년간 0.5℃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16) 연안정비 수요중 연안침식대응사업이 70%를 차지한다.

17) 해양생태계 보전관리계획에 포함된 충청남도의 계획내용은 태안 신두리 생태계보호 구역관리(05-), 연안습지 생태계 이용방안, 하구 관리체제 구축, 해양생물 종다양성 보전대책 수립, 해양생태계 기본조사 실시, 전국 바닷가 실태조사, 무인도서 종합적 관리, 연안정비사업 등이다

18) 영국은 수해방지를 위해 '3단계 홍수위험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광역차원의 광역·도시·개별개발단위의 홍수위험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천 및 하수도 시설을 중심으로 구조적인 대책을 주로 시행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입지, 토지이용, 건축물, 대피체계 등 종합적인 대응책이 강조되고 있다. 템즈강은 2100년까지 지속적으로 수위가 상승할 것을 예상하여 TE2100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장기 적응 계획으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미래의 자산을 등을 고려한 장기계획이다.

19) 네덜란드 해양전문가들은 2100년에 약 65-130cm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적응전략을 수립하였고, 동시에 화물이나, 여객운반, 경제개발 목적의 접근성을 주요 요소로 고려하였다.

20) 1966년 침수피해로 해마다 물에 잠기는 베니스를 보호하고, 최근 해일발생에 따른 피해 급증에 대비하고자 총 78개의 거대한 수문을 바다속에 건설하여 해일방지를 위한 해저담 건설계획으로 해수면이 1.1m에 이르면 자동으로 10층높이의 담이 세워지는 계획이다.

넷째, 대중국 수산업 수출 전환 등 적극적인 공격적 마케팅이 필요하다.

수산업도 어획량, 어종 분포, 어종의 생태학적 특성이 변동하기 시작하였는 바, 대표적으로 오징어의 경우 기존의 주어장인 동해안에서 최근에는 해수온 변화로 서해안 지역의 생선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제주도, 남해안 인근에서 참다랑어가 어획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²¹⁾ 우리나라 연근해 어장도 해수온 변화로 명태, 도루묵 등 냉수성 어종의 생선이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오징어, 멸치, 고등어, 참다랑어 등 난류성 어종 생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도 수산업에 대한 대응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바, 충청남도에서는 이와 관련한 법적²²⁾·제도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대중국 수산물 수출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중국은 수산물 생산량의 30%이상을 차지하는 생산대국이지만, 시장경제와 경제발전 및 도시화 요인에 따른 수입 증대가 예상되고, 부유계층의 양산과 연간 소득의 증가, 중국의 수산물 생산위기에 따른 수입요인이 작용 예상된다. 대중국 수출전략품목으로는²³⁾ 삼치, 갑오징어, 왕게 등이 있으며, 수출품목 중 · 고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수출품목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하며, 수산식품 거점단지의 조성사업도 고려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수산물 소비는 국제추세와 동일하게 증가추세에 있다. 어패류의 단백질 공급량은 연평균 2.4%의 증가율을 보이고, 수산물은 맛과 영양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고품질 소비성향에 잘 부합되는 식품으로 향후 그 증가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산식품은 원료인 수산물을 이용한 가공·제조·보관·유통·조리 및 식품 서비스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로 지적되는 문제점²⁴⁾도 다양하다. 지역별로 풍부한 해양수산식품자원을 활용한 고품질의 수산식품개발과 브랜드화로 지역특화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서는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충청남도에서는 아직 체계적인 수산식품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지 않은 상

21) 국립수산물과학원(2007),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동 지표 탐색 및 모니터링 지침서.

22) 기후변화와 관련된 수산업의 관련 법체계는 다음과 같다.

- 어선어업 : 수산업법, 어선법, 수산자원관리법,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법률, 어업자원보호법, 낚시어선업법 등
- 양식어업 :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어장관리법,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수산물 품질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어업협정체결 특별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 원양어업 : 수산업법, 원양산업발전법, 국제수산물기구협약, 유엔해양법 등
- 기후변화대응 : 녹색성장기본법, 기타-해양수산발전기본법 등

23) 대중국 수출 전략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국 : 삼치, 갑오징어, 왕게, 냉동 굴, 황다랑어, 명태, 해삼, 청패각(전복), 캐비아 대용물, 해초류 등
- 중 · 고소득층 대상(라오닝성) : 전략품목 : 겹질있는 냉동새우, 냉동 고등어, 냉동 황다랑어, 냉동 게, 냉동 청어 / 확대품목 : 갑오징어, 명태, 해삼, 삼치, 병어
- 상하이시 : 전략품목 : 냉동뱅장어, 오징어, 넙치류(넙치, 가자미, 서대기 제외), 냉동어류(삼치, 복어, 달고기, 임연수어, 불낙, 새꼬리민태, 아귀, 먹장어, 홍어, 밀크피쉬, 민어, 가오리, 까나리, 이빨고기, 기타 냉동어류 등임) / 송어
- 상하이시(고소득층 대상) : 고소득층 소비 품목 : 바다가재, 대하, 청어, 참치, 전복, 연어(송어) - 수출하지 않고 있음 / 바다가재, 대하, 닭새우, 청어, 전복, 황다랑어, 눈다랑어, 송어

황에서 거점단지의 조성사업도 미추진중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선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사업²⁵⁾을 우선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수산업에 대한 활성화로는 그 목적과 명분이 약하므로, 식량문제²⁶⁾적 측면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주민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되고, 갯벌을 활용한 어업의 확대발전이 요구된다.

서해안의 대표 자연자원은 갯벌이다. 갯벌을 활용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접근이 필요하지만,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갯벌어업으로 대표된다. 중앙정부에서는 갯벌어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갯벌어장 복원 및 유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모니터링, R&D 투자 확대, 갯벌참굴, 해삼 등의 전략품목 시범사업 추진, 갯벌어업 산업화 교육 및 홍보를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투자²⁷⁾하고 있다. 이중 충청남도에서는 갯벌참굴의 경우, 태안, 서천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종패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 구축, 양식어장 개발 및 자본 유치 확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출기반을 조성하고, 충청남도에서는 일본, 홍콩, 중국 및 미국 시장개척을 위한 마케팅 방안을 전략적으로 확대발전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해삼의 경우 태안을 중심으로 그 생산량이 빠르게 증가²⁸⁾하고 있는 바, 생산-가공-유통-수출의 연계방안을 구축하고, 일반 갯벌어장과 전략수출단지(양식업)로 구분하여 생산을 증강할 필요성이 있다. 이외에 바지락, 백합, 꼬막, 가무락, 갯지렁이, 낙지, 합초, 꽃게, 새우 등에 대해서 생산-가공-유통-수출로 연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일곱째, 해양문화시설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24) 수산식품산업의 공정별 문제점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공급측면 : 국내산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 약화
- 가공측면 : 사업체의 영세성, 부가가치 창출능력 저하, 구매형태 다양화에 대응 능력 부족, 수산물 가공사업 육성사업의 가시적인 사업성과 도출 미흡
- 유통측면 : 유통 물류기반 미비, 저온유통체계 미비로 상품성 및 안전문제 제기, 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성 미흡, 산지시장 유통 기능 약화 및 소비지 대형 소매업의 위상 강화
- 외식업측면 : 웰빙식품으로서 수산식품 수요 급증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대응 미흡, 수산물 식재료가 대부분 수입산으로 조달, 산지와외의 연계성 저하
- 수산전통식품업 측면 : 국산원료의 안정적 조달 어려움, HACCP시설도입 어려움

25) 대상은 어업인, 영어조합법인, 농어업 경영체, 어촌계, 어업인주식회사, 수협 및 지자체이고, 우리나라에는 부산-수산식품가공업 산학관연구센터, 부산-수산물 종합유통 물류기반시설, 목포-고기능 수산식품지원센터, 여수-수산물 종합센터, 영광-염산 향화도 바다매체타워시설, 포항-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조성, 고창-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등이 있다.

26) 식량문제는 인류역사의 발전과 궤를 같이하고 있으며, 향후 식량의 무기화에 대한 우려라는 지극히 협소한 국가안보차원에서 인식 되었으나, 현재에는 인간안보라는 인류행보의 차원에서 식량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식량안보의 중심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확보와 더불어 식량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더욱이 식량안보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식량의 안정된 공급확보가 단순히 수위로 계산된 물량적 공급확보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그것은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반영되고 소비는 국제추세와 동일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인간안보의 개념은 1994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정의되었다. 인간안보의 의미를 기아, 질병, 가혹행위 등 만정적인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가정, 직장, 사회공동체속에서 일상생활양식이 갑작스럽게 파괴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간안보를 구성하는 7가지 요소 중 충분한 식량안보와 기아로부터 자유를 의미하는 식량 안보(food security)가 포함되어 있다.

27) 갯벌어업 육성을 위하여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총 1,935억원을 산정하고, 농특회계, 광특회계, 수발기금 등의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28) 우리나라 해삼생산량은 2002년 이후 점차 증가하다가 2007년 2,936톤을 기록한 후 2009년부터 점차 감소 추세였으며, 해삼 수출액은 2000년에는 302천 달러였으나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11년에는 13,086천 달러에 이르고 있다. 그 원인은 해삼유통이 마을어업 생산 수집상 보다리상 수출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중국의 수입업자들이 서해안 해역을 돌면서 생산물을 수집하여 송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앙정부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²⁹⁾과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10)³⁰⁾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적 여건에 발맞추어 해양문화 창달을 도모하고 있다. 충남에 분포하는 시설은 단순 관람형이며, 서해안의 특성을 반영한 해양문화시설에 대한 특색있는 시설이 요구된다. 서해안의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한 바, 어촌 전통문화를 반영한 문화관이 필요하다. 어촌전통체험마을은 완도, 영덕, 거제, 안산, 삼척, 제주, 부산에 민속관이 있으며, 갯벌 생태계를 반영한 해양문화시설도 충청남도는 없지만, 순천만 자연생태관, 증도갯벌생태전시관, 강화갯벌센터, 무안생태갯벌센터 등이 있다. 특히, 지역의 특성을 살린 테마 박물관은 소금, 등대, 독도, 조가비 아트 등이 있고, 국내의 유일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박물관은 소금박물관, 국립등대박물관, 독도박물관, 장생포고래박물관, 동해 고래화석박물관, 세계조가비박물관 등이 있으나, 아직 충청남도에는 특성을 반영한 박물관이 없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참고문헌

- (사) 한국정치사상학회(2012), 지속가능항 발전 목표 논의 대응 및 발전방안 연구
- 국토연구원(2011), 해양문화시설 중장기 확충방안.
- 국토해양부(2010),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 국토해양부(2011),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을 위한 연안정비사업 연구, 제2차 연안정비계획 수정.
- 국토해양부(2011),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재원조달 방안 연구.
- 국토해양부(2012), 해양생태산업체제 구축방안.
- 김창길 외(2009),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부문 영향분석과 대응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국립식량과학원.
- 녹색성장위원회(2011), 기후변화 적응 랜드마크 사업 연구.
- 녹색성장위원회(2012), 신재생에너지 대규모 수요창출 연구방안.
- 농림수산식품부(2009), 수산분야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연구.
- 농림수산식품부(2010), 수산물 산지위판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 농림수산식품부(2010), 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실천방안 연구.
- 농림수산식품부(2011), 기후변화에 대한 수산업의 정책적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 농림수산식품부(2012), 갯벌어업 육성을 위한 연구.
- 충남발전연구원(2013), 충남 서해안권 발전방안 워크숍.
- 해양수산부(2002), 해양수산분야 지속가능발전 전략수립 연구.
- 해양수산부(2007), 기후변화 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대책 연구.
- 해양수산부(2007), 대중국 수산물 수출확대방안(Ⅰ).
- 해양수산부(2007), 해양생태계 보전 · 관리 기본계획(2008~2017).

29)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4조(해양문화의 창달 등)

30)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 해양문화 및 역사의 정체성 발견 활동 증대에 대응하여 해양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가치의 홍보를 위한 해양교육 인프라의 보급 · 확산,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건립을 통한 해양문화 인프라 구축이며, 해양문화시설 관련법 · 제도는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10), 해양수산발전기본법, 과학관육성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습지보전법 등이 있다. 충청남도에 해양문화시설로는 당진 삼교호 해양테마과학관(시립, 당진해양관광공사, 2010), 고남패총박물관(군립, 태안군, 2005), 서천해양박물관(사립, 2002), 국립해양생물자원관(국토교통부, 공사중)의 4개소가 있다.

환황해권 시대, 충남 물류산업의 여건 변화와 대응과제

임영태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충청남도는 국토의 중앙에 있어 물류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국가물류 정책이나 계획에 부합되는 대응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있는 지역이다. 그동안 물류활동에 매우 밀접한 항만, 철도 및 도로망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물류거점으로서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많아,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전략 마련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물류정책의 방향 제시가 끊임없이 요구되어 왔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충청남도가 환황해권시대의 물류거점으로 우뚝서기 위한 물류비전 정립과 물류산업의 여건변화와 대응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충남 물류의 현 주소

충청남도에는 3개 유형, 143개소의 산업단지가 운영 중에 있다. 즉, 유형별로 볼 때 국가 산업단지가 5개소, 일반 산업단지가 48개소, 농공단지가 90개소가 운영 중이다. 또한 유통업무설비(물류단지 및 물류시설)는 충청남도에 물류단지 4개소, 물류시설이 9개 등 총 13개가 있다. 이 중 4개의 물류단지는 아산시에 2개소, 서산시 1개소, 당진시 1개소가 있으며, 물류시설은 천안시 2개소, 당진시 6개소 등이 있다. 충청남도의 화물터미널은 총 2개소로, 천안시와 아산시에 각각 1개소가 있고, 대지면적은 55,371㎡, 건축연면적은 10,366㎡으로 전국의 물류터미널 수와 규모(31개소, 대지면적 1,221,536㎡, 건축연면적은 332,010㎡) 대비 3~6%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0년 12월 기준 전국의 총 도로연장이 105,565km인데 비해, 충청남도 도로연장은 7,844km로 전국 도로연장의 7.43%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또한 충남의 철도역사는 19개소로 전국 848개의 2.2%에 불과하며, 철도연장은 232.5km로서 전국 4,392.6km의 5.2% 밖에 안되며, 일반철도와 경부고속철도(천안아산역)가 있고, 도시철도는 없는 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총54개에 달하는 무역항과 연안항 중 충청남도의 항만은 서해권에 속하며 총 7개항만이 운영 중에 있으며 무역항 5개항과 연안항 2개항이 있다. 2010년 기준 충청남도의 항만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해안선 연장은 932.80km이며, 방파제는 2,999m, 접안능력은 75선석, 하역능력은 93,209만톤/년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에서 평택·당진항의 접안능력은 45선석이며, 하역능력은 59,494만톤/년으로 충남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충남의 물류여건 변화와 전망

충남의 물류여건변화와 전망을 대외 개방 및 산업·취업구조의 변화와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지역 개발환경의 변화, 산업간·산업내 수직·수평적 협력 강화와 IT·환경·에너지 등 첨단 기술분야의 발달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환경적 산업에 대한 관심고조 등 6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자.

첫째, 대외 개방 및 산업 취업구조의 변화이다. 세계경제 불확실성 지속, 국제 무역자유화에 따른 지역 경영전략 변화,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환황해권 시대 전개, 환경문제의 국제적 관심 증폭, 에너지 자원 위기의 도래, 삶의 질 관심 고조와 '고용 없는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충남의 취업구조는 1차 산업 비중이 2000년 32.0%에서 2010년 16.8%로 크게 낮아졌으나, 2차 산업 및 3차 산업 비중은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2차 산업 비중은 지역 내 산업단지 조성효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인구와 인구구조의 변화이다. 충남의 인구는 2000년부터 2005년 연평균 0.54% 증가, 2005년부터 2010년 연평균 0.94% 증가하였다. 2000~2005년간 충남지역에서 유출되는 인구의 지역분포를 보면, 총 유출인구의 55.4%가 충청남도 내에서 이동하였고, 수도권 및 대전광역시로의 유출이 30.5%, 2005~2010년에는 59.0%로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로의 인구유출이 증가추세이나 수도권으로부터의 충남 유입 인구는 오히려 증가하여 역전되었다.

셋째, 지역 개발환경의 변화이다. 항만 배후지 및 서해안고속국도 IC 연결부를 중심으로 신산업집적지·물류유통거점 등을 조성하여 무역항 및 황해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하며, 금강의 수자원, 역사·문화자원, 경관·환경자원, 토지자원, 다양한 농촌 어메니티자원 등을 활용하고, 복합적인 녹색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충남 남부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내포신도시와 세종시 등 중부권의 물류 유통 거점 육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대덕R&D특구와 연계한 첨단생명산업 및 정보산업 육성, 근교·관광농업 활성화와 다양한 형태의 도시근교형 전원주거지 개발, 수자원·관광개발 및 도시근교형 산림 수변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넷째, 산업간·산업내 수직·수평적 협력 강화이다. 전략산업·주력 기간산업 육성 및 클러스터 조성, 신성장동력 육성 및 네트워크형 산업클러스터 구축, 중소기업 지원 강화 및 기업지원기반 조성, 산업집적 촉진을 위한 생산기반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섯째, IT·환경·에너지 등 첨단 기술분야의 발달이다. 고효율 에너지 공급기반 구축,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을 통한 수요관리가 전개될 전망이다.

여섯째 친환경적 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식품체계 구축, 임업 경쟁력 강화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 친환경 축산업 육성 및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 수산자원의 보전·관리 및 어업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충남의 물류체계 발전전략

충남의 물류체계발전을 위한 비전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 즉, 비전은 “광역경제권간 연계와 황해경제권의 물류거점”이고 목표는 원활한 경제활동의 기반 구축, 지역전략산업 성장을 촉진,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이 3가지다. 그리고 추진전략은 첫째가 항만, 공항과 연계한 체계적인 철도 및 도로망 구축이고 둘째가 산업단지와 물류시설간의 효율적인 연계체계 구축이며, 셋째는 산업특성에 부합하는 물류시스템 구축, 넷째는 지역물류산업간 협력체계 구축이며, 다섯째는 물류관련 지원시설 구축 및 제도마련으로 정리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교통망 확충전략인데 국가기간교통망 구축 및 충청남도 지역간 연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둘째, 산업단지 배후물류시설 연계로서 철도 및 고속국도 결절지역, 항만 배후지역, 타 권역과의 연계성을 고려, 거점물류시설과 특화유통시설(농산물, 수산물 등)과 산업단지와의 연계를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산업단지 지원 기반 확충이다. 반도체 첨단부품소재는 청주공항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철강, 석유화학은 항만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자동차부품, 농업바이오는 철도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문화컨텐츠 등은 고속국도, 고속철도망과의 연결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물류시스템 지원은 물류시설 차별화와 연계체계 특화를 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물류관련 주체간의 협력체계 구축이다. 화주, 물류서비스 제공업체, 부가서비스제공자 및 타 물류마켓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종합화물수송체계, 종합창고 지원체계, 수출입 물류지원체계, 물류정보 및 지식지원체계, 공동구매 지원체계 등의 공동물류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는 공동물류지원사업 등 물류관련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공동수배송/조달, 공동물류센터, 수출입물류, 물류정보, 물류지식, 물류지원폴 등을 위한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차원의 시범사업을 추진 하고 전지역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충남의 물류체계 대응과제

충남의 물류체계발전을 위한 4가지 대응과제로는 첫째, 물류시설의 확충 및 기능개선 둘째, 연계물류체계 구축 셋째, 물류정보화 및 표준화 추진 넷째,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인데, 4가지 대응과제의 구체적인 사업들을 살펴보자.

우선, 물류시설의 확충 및 기능개선이 충남의 물류체계 대응과제 중 첫 번째로 꼽힌다. 물류시설 개발 방향과 전략으로는 효율적인 물류시설체계 구축으로 물류비를 절감하여 국가경쟁력 강화하고, 내륙 및 항만·공항 물류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물류시설의 건설효과를 극대화할 뿐만아니라, 복합운송체계 연계구축을 통해 화물통행 수요를 감소시키고 물류시설 운영을 효율화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충남의 물류시설 배치 구상은 국가물류시설개발계획을 토대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되, 평택·당진항의 발전 여건변화와 성장추세 등을 고려하여 항만을 배후로 한 국가물류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거점 물류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산업단지의 배후기지로서의 역할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권역별로 지역물류의

거점시설을 설치하되, 기존 설치된 물류시설은 기능을 보강하고, 계획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의 물동량 및 시설수요와 추이 및 여건분석을 통해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두 번째 대응과제는 크게는 연계물류체계 구축이며, 이를 위해서는 고속국도 등 도로망 확충과 철도망 확충, 그리고 기타 항만시설 및 화물주차장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먼저 고속국도 등 도로망 확충에 있어서 3개의 노선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당진~천안간 고속국도 43.9km를 조기에 착공해야 한다. 이 도로는 북부 산업권의 물류지원도로로서 당진에 급증하고 있는 산업수요에 따른 발생물동량을 내륙으로 원활히 수송하기 위한 도로이면서 수도권 물류수요를 당진항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산업단지간 물류 수송을 통해 산업간 연계를 강화시키면서 클러스터 구축기반을 확충할 뿐만아니라 천안아산지역의 첨단산업 관련 물동량을 청주공항까지 연계함으로써 물류기반을 확충시킬 수 있는 물류축으로서 상당한 중요성을 갖는 도로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노선으로서 평택~청양~부여간 86.3km의 제2서해안 고속국도 건설인데, 사실상 확장이 어려운

서해대교 교통량 분산을 위한 대체도로이면서 서해안고속국도의 교통혼잡 완화와 물류 애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도로라 말할 수 있다. 수도권과 충청·호남권을 연결하는 고속교통망의 구축으로 국가 물류 수송비용 절감과 통행체계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세 번째 노선은 대산~당진간 24.3km의 고속국도를 건설함으로써 대산항 개발 및 배후산업단지의 물동량 급증에 따른 통행 시간 단축과 물류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대규모 국가기간 산업시설이 밀집한 대산지역의 원활한 물동량 처리를 통해 물

〈그림 1〉 2020년 충청남도 지역물류 거점시설 배분구상



출처 : 충청남도, 2012, 충청남도 지역물류기본계획

류비 절감과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철도망 확충에 있어서는 5개의 철도건설사업을 통해 연계물류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그 첫 번째가 아산산단 인입철도 32.6km 건설사업으로서 아산만권 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철도망 구축 사업이면서 서해안선의 합덕에서 아산만권에 입지하고 있는 산업단지(당진지역)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도로망에 의한 물류처리에서 철도망을 통한 대형물류처리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수송함과 동시에 항만과 연계하여 원자재 물동량 및 생산품 수출물동량의 물류비의 절감시키는 효과를 통해 경쟁력을 증대시켜 줄 것이다. 두 번째는 대산항 인입철도 철도 18.5km 건설사업으로서 대산항 물류기반 확충 및 기능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이면서 대산산업단지의 물동량과 내륙의 항만물동량 처리를

위한 인입철도를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서해산업선에서 연결되는 인입철도로서 우선적으로 북부산업단지 지원의 서해산업선 건설과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안흥~인주간 78.3km의 서해산업선 철도건설로서 충남의 북부권 산업입지를 녹색철도망으로 연계하여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항만과 산업을 연결하는 산업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이 노선은 서해선과 연계하여 남북축과 연결된 동서축 확충차원에서 도로망 기반의 물류체계를 철도 중심의 물류체계로 개선할 수 있도록 철도망을 산업입지 중심으로 노선을 조정하여 타당성 검토 후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네 번째는 보령~조치원간 충청선 철도 88.8km 건설사업으로서 충청권 광역경제권의 동서축 연계 및 내륙첨단산업권 지원을 위한 항만과의 연계를 위한 녹색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서해안과 내륙권 및 강원권으로 연결되는 철도망을 완성하게 되어 내륙과 연계된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할뿐만 아니라 충북선과 연계한 청주공항을 통한 항공물류체계 구축의 기반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로 아산만권산업철도 75km 건설사업은 천안, 아산, 당진, 서산 등 충남의 북부지역 특히 아산만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및 개별적으로 산업입지가 집중하고 있고 향후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지역의 산업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며 에너지절약형의 철도망 구축이 필요하다. 이전부터 충남의 북부지역은 수도권과 인접하여 있어 물동량이 많은 지역이며, 해안과 자연자원이 풍부하여 관광객 등 이동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 기존 도로망이 항상 정체되는 구간이 많아 화물의 철도수송분담률을 높여 원활한 물류흐름 및 교통흐름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산업단지와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신규로 노선을 검토하고,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기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기타 항만시설 및 화물주차장과 같은 기타시설 확충 또한 연계물류체계 구축에 필요한데, 우선 항만시설 조기 건설과 관련해서는 대중국 등 동북아 수출입의 전진기지로서 당진항, 대산항, 태안항, 보령신항 등을 조기 확충하여 충청광역경제권, 내륙첨단산업권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지원항만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평택·당진항의 급속한 물동량 증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배후 물류단지와 연계한 항만시설 확충 및 개발이 조기에 추진되어 원활한 물류수송을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당진항(신평) 화물주차장 건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당진항이 국내최대의 철강생산 메카로 급격하게 부상함에 따라 국도 38호선 및 당진항 주변 산업단지 도로에 화물차 불법 주차로 인한 대형교통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당진항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화물차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운행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충남의 물류체계 대응과제중 세 번째는 물류 정보화 및 표준화의 추진이다. 우선 물류정보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류거점 간 정보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정보인프라를 확보하여 이를 활용하여 인프라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RFID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전국 단위 종합 물류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화물추적시스템을 보급하고, 항만, 철도역, 고속국도 톨게이트, 거점물류시설 등 주요 공공물류거점에 대한 정보화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편 물류 표준화 추진 또한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국가물류표준화 기본계획을 현실화하고, 부처별 물류표준화 기능을 일원화해야 할 것이다. 국가에서는 물류 세부분야 및 기능별 표준화 실태를 분석하고, 부처별로 추진

되고 있는 물류표준화 촉진제도를 부처를 망라한 물류표준인증제로 확대·개편하고, 인센티브 등 지원방안 도입과 국가물류표준화 방향에 따라 초기부터 물류표준화를 통한 물류효율성 증대와 인센티브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물류표준 확산을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동북아를 대상으로 국가간 협력을 추진, 장기적으로 타지역까지 확대, 동아시아권 공동 표준체계 수립을 위한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 한-아세안 교통물류 협력사업 등 물류부문의 글로벌리더십 확보 추진, 중국 및 국제적 수출입 산업의 물류표준화를 통해 국제 물류 중심으로서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밖에 물류정보부문의 표준화 확산 또한 유도해 나가야 한다. 즉, 물류정보의 생성 및 거래를 위한 표준체계 구축과 RFID 등 신기술의 표준화 현황 분석 및 공공물류거점에 표준 RFID 이용 기반을 구축하고, 업종별 RFID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산업체와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국가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선도적인 물류정보화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충남의 물류체계의 네 번째 대응과제는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중 대표적인 것이 물류인력 양성과 물류공동화 역량 강화인데, 우선 물류인력 양성을 살펴보자. 지역의 대학을 중심으로 물류인력에 대한 예상수요, 니즈를 분석하여 체계적인 중장기 물류인력양성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물류인력의 실무능력을 강화하고, 고급 물류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물류관련 국가자격제도를 활용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운영해 나가야 하며, 물류관리사 교육프로그램을 지역 물류관련 시설과 연계하여 실무중심형으로 전환하고, 필요인력을 공급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물류공동화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물류공동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물류공동화 추진 시 요구되는 각종 규제개선, 지원정책,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에서 물류공동화 추진을 위한 계획-투자-사업추진-사후관리 등 전방위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지역내 산업체 홍보 및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물류 공동화를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도시물류 공동화 추진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규제개선, 지원정책,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새로운 물류공동화 사업모델 발굴하고 사업화하는 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즉 도심내 공동물류시설 개발을 위한 각종 규제 개선,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공동물류시설에 대한 소요를 산정하고, 공동물류시설 지정 및 개발 추진하며 도시내 공동물류사업을 위한 모델을 발굴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형 물류수요를 유발하는 산업단지 내에 공동물류시설의 입주를 유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 마련과 산업별·지역별 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철강산업 등 유사업종을 대상으로 연안선박 공동배선제 등 수송공동화 추진, 재래유통시설, 농수산물유통센터 등 중소유통업자를 대상으로 물류공동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충남지역의 물류관련 이해당사자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정기적인 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여기서 제시된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도 하고 충청남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선도적으로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갖고 있는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참여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환황해권 시대, 충남 서해안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지속가능성

김경태 | 충남발전연구원 문화디자인연구부 책임연구원

‘서해안 시대!’ 언제부터인가 자연스럽게 문장 서두에 붙는 말이다. 그럼 ‘서해안 시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시작은 경제쪽에서 나온 것 같다. 1980년대 후반 대중국과의 교역으로 늘어난 무역량 때문에 생긴 말로 예전엔 중국과 수교를 안했기 때문에 서해안이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무역물동이 물리는 부산쪽으로만 발전이 있었는데 남동권의 과밀화에 따른 국토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토의 균형 개발 정책이 추진되면서 서해안이 경제 개발의 핵심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중국과의 수교로 수출입이 늘어난 관계로 서해안의 항구들이 개발되고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서해안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것 때문에 서해안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물류가 온다는 것은 사람도 같이 온다는 것이다. 이에 관광산업의 측면에서도 중국인 관광객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충남 서해안의 경우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을 통해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동해안으로 향하던 발길이 서해안으로 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서해안의 매력에 빠져드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충남의 관광객수도 2012년 전체 92,999,092명으로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충남 서해안에 인접해 있는 7개시군(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의 2012년 관광객수는 62,009,454명으로 충남 전체의 66.7%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관광의 행태를 보면 하절기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관광객 위주의 단순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여름 성수기 집중현상으로 교통체증, 수용력 부족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발생시켜 충남 서해안을 찾는 관광객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간 국민관광의 주요한 행태로 자리 잡았으나, 해수욕장 중심의 관광행태, 하계 및 동해안 편중 현상 등의 특성으로 다양한 성공사례가 창출되지 못하였다.¹⁾

또한 서해안을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들의 해양관광활동은 해수욕, 해변경관 감상, 수산물 구매 시식, 일부 계층의 해양레저스포츠 활동 등 단편적 활동에 치중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서해안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요트, 모터보트 등 해양레저 스포츠를 적극적으로 즐기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그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국민 소득 수준의 향상과 함께 주 5일 근무

1) 김영준, 「해양 관광개발 사례 연구: 국내외 관광개발 사례 연구(II)」, 한국문화연구원, 2007.

제 확산 및 5일제 수업시행 등으로 여가시간이 증가하면서 해양관광 레저에 대한 수요는 확대될 것²⁾이라는 것이다.

이는 여가문화가 성숙한 미국, 유럽 등에서 육상관광의 대안으로 해양관광 레저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알 수 있다. 현재 세계 해양관광객수는 2010년 7.4억명에서 2020년 11.2억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해양레저스포츠 수요도 200년 157만 명에서 2003년 239만 명, 2010년에서 554만 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해양경찰백서, 2011).

이런 추세는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에서 보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전후한 시기에 해양레저산업이 꽃을 피웠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3만 달러를 전후한 시기에 급성장하는 것에서 유추해 보면 우리나라도 자연스러운 단계로 해양레저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해양레저산업의 대표적인 산업인 요트 관광레저는 체험형 관광시장의 급성장, 새로운 여가 트렌드와 중앙부처의 마리나 정책과 맞물려 국가의 전략적 동력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제적 문화적 인프라 조성 등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연안지역에 인접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마리나 조성사업,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해양관광개발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³⁾하고 있어 과잉투자와 중복투자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 충남 서해안 관광활성화에 적합한 해양관광의 형태는 무엇일까? 먼저 해양관광의 개념부터 알아보자. 해양관광(marine tourism)은 공간적으로 해안선에 인접한 육지, 바다, 연안, 해안, 해역 등에서 이루어지는 관광으로 연구자에 따라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⁴⁾ 여기에 해양관광(marine tourism)은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관광활동을 의미하므로 개념 정의는 동기, 공간, 활동 측면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양관광(marine tourism)이란 “육상관광과는 다른 바다와 관련된 관광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해변, 해상, 해중, 해저 등 해양에서 이루어지거나 해양과 연관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관광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해양관광의 유형은 관광시장과 관광자원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관광시장 측면에서는 해양의존형과 해양연관형으로, 관광자원 측면에서는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으로 대별할 수 있다. 관광시장 측면에서 해양의존형이란 해양과 직접 연관되는 형태로서 스포츠형, 휴양형, 유람형으로 재구분되며, 해양연관형이란 해양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활동유형을 의미한다.⁵⁾

다음으로 충남 서해안과 관련된 대표적인 개발계획을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조3,472억원을 투입하는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이 있다. 이 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충남, 경기, 전북, 전남

2) 관계부처 합동, 「해양관광 레저 활성화 방안」, 2011.11.

3) 국토해양부,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8.

4) 김동주, 이은간, 이동렬, 「서남해안 해양관광 활성화 전략」, 한국은행 목포본부,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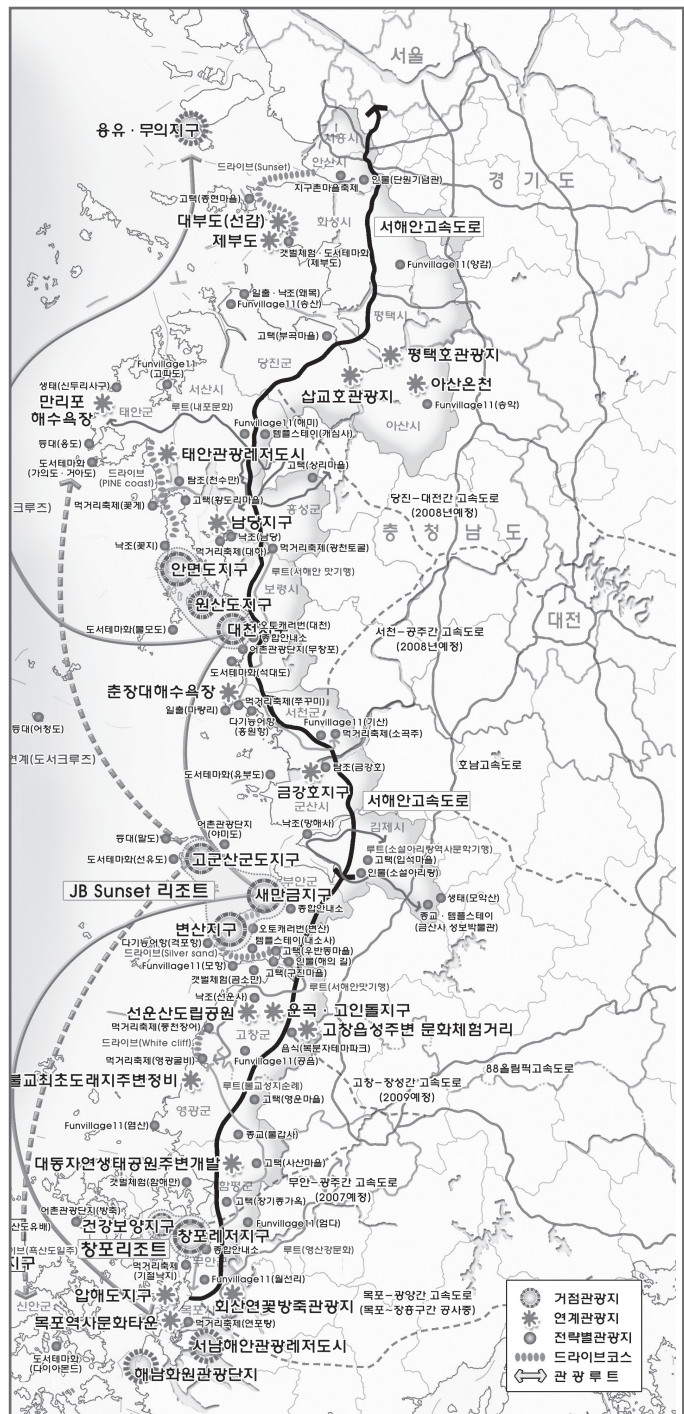
5) 문화체육관광부,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안)」, 2011, p.189

3. 환황해권 시대, 충남 서해안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지속가능성

등 서해안 4개 道, 20개 시·군(9,269 km²)을 대상으로 지난 2008년부터 10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충남의 경우 7개 시군(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을 대상으로 24개 사업(거점 2, 연계 3, 전략 19)이 계획되어 있다.

2011년에 수립된 ‘제3차 관광개발 기본계획’에서는 시·도 관광권과 더불어 5+2 광역경제권을 관광권역으로 수용하고 초광역 관광벨트 설정으로 계획권역을 기능적으로 연계·보완하였으며, 해양관광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해양관광도시 지정 및 육성, 해양관광자원의 개발 및 이용활성화, 수상관광레저스포츠 기반조성, 크루즈관광 인프라 확충 및 활성화이고 권역별 계획에서 충남은 전통문화 및 해양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충남 서해안 지역을 국제휴양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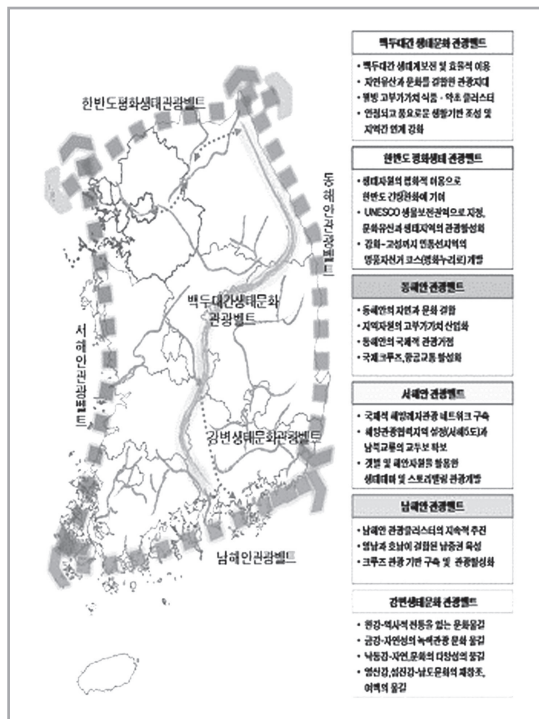
또한 충청남도에서 계획한 ‘제5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2012~2016)’에서는 전국민이 찾는 ‘국민관광’, 모두가 이용하고 향유하는 ‘복지관광’, 글로벌 관광명소가 자라인 ‘휴양관광’, 구석구석 균형성장하는 ‘산업관광’을 목표로 잡고 공간적으로 5개 관광권(해양도서, 내포문화, 역사온천, 백제금강, 녹색유교)으로 나눠 개발을 추진하는 계획을 세웠다. 권역별로 보면 서해안은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을



〈그림 1〉 서해안 관광벨트개발계획 종합구상도

포함하는 '해양도서 관광권'은 서해안 해양 관광거점과 관광 레저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해양 휴양관광지역으로 개발하고 서산시, 당진시, 예산군, 홍성군을 포함하는 '내포문화 관광권'은 내포문화권의 인물, 종교, 민속자원과 연관관광자원이 연계하는 역사 문화관광지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계획 기간 동안 투자비는 총 1조964억원으로 관광지 개발에 7천265억원, 핵심 전략사업 1천821억원, 전략 추진사업 380억원 관광 진흥사업에 1천498억원 등이다. 위의 계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충남 서해안 관광개발 유형은 해안 의존형에서의 휴양형이고 해양 연관형으로는 내포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해양문화관광형이라 구분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계획들은 계획되고 잘 추진되고 충남 서해안 관광은 활성화 될 것인가? 아쉽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먼저 충남은 내포 시대 개막과 환황해권 시대를 가속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광 개선'이라는 칼을 빼 들었지만, 인프라 확충, 관광자원 구축, 예산 조달 등 앞으로 해야 할 숙제가 산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5차 충남권 관광개발 계획 자료를 보면 최근 충남 관광을 꺼리는 이유로 교통시설(접근성 증대) 미흡, 인프라 시설(테마파크, 카지노, 주차장) 부족 등이 조사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확보는 충남 지역 재정을 고려하면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 관광개발 사업의 예산 투자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또한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지방 정부의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방문객 중심의 관광시설 및 서비스시설 조성이 요구된다. 특히 중국관광객들이 보고, 즐기고,



〈그림 2〉 초광역 관광벨트 구상도



〈그림 3〉 제5차 충남관광개발계획 계획도

먹고, 체류할 수 있는 숙박시설, 식당시설, 쇼핑시설, 안내시설, 중국어 가이드 육성 등의 관광수용시설 정비가 필요하다. 쇼핑시설의 경우 면세점의 유치나 관광시장 조성 등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충남 서해안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단순한 해수욕장 위주의 관광행태에서 벗어나 해양레저관광 시설의 조성이 필요하다. 스포츠형 관광레저 활동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옥외 관광레저활동이 주요 트렌드로 정착되고 있다.⁶⁾ 향후 관광레저 활동 변화 전망은 W B C(도보, 자전거, 캠핑) 등의 활동이 증가할 전망이고 전통적 레저활동은 세분화와 복합 이용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또한 수상과 복합 레저 활동의 증가가 예상되는데,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수상레저 활동 유형은 요트, 고무보트, 수상스키, 패러세일, 조정, 카약, 카누, 워터슬레드 등 15개 종목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트렌드 변화와 신종 기구가 확산되어 다양한 수상관광레저 활동을 즐기고 있으며, 장비의 다양화와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0년 수상관광레저 활동 인구수는 사업장 이용자는 477만명, 개인 이용자는 77만 등 554만 명으로 집계되고⁷⁾ 있어 서해안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 조성이 요구된다. 그리고 시설의 고급화와 상품화를 통해 차별화 전략을 추진해야된다. 또한 충남 서해안 관광자원의 최대 강점인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지 조성이 필요하다. 갯벌, 사구, 철새 등의 자원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에서 여기에 상품화를 위해 생태숙박시설, 친환경음식, 환경관광상품 등의 개발을 통한 지역소득창출과 연결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관광개발은 지역주민 주도의 관광개발을 통해 충남 서해안 관광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지역민에 의해 계획, 조성, 운영되는 관광지 조성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 「해양관광 레저 활성화 방안」, 2011.
 국토해양부,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8.
 국토해양부, 「마리나산업 육성대책」, 2011.
 김동주, 이은간, 이동렬, 「서남해안 해양관광 활성화 전략」, 한국은행 목포본부, 2011.
 김영준, 「해양 관광개발 사례 연구 : 국내외 관광개발 사례 연구(II)」, 한국문화연구원, 2011.
 김윤영, 김영준, 「요트관광레저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정승구, 김구, 「제주지역의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2012.
 문화체육관광부,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2011.
 문화체육관광부, 「2011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2.
 해양경찰청, 「해양백서」, 2011.

6) 김윤영, 김영준, 「요트관광레저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7) 해양경찰청, 「해양백서」, 2011.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정책 연구

윤정미 | 충남발전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책임연구원
김정하 | 충남발전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연구원

서론

인구감소, 대형할인점의 출점, 소비자 패턴 변화 등으로 지역상권은 지속해서 쇠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기존에 추진하였던 전통시장 중심의 활성화 정책만으로는 지역상권 활성화의 한계에 달하였다. 즉, 개별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단위의 지원방식으로는 상권회복이 어렵고 소비자 기호의 다양화, 생활스타일의 변화 등 시대적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상권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에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2010년 국가 차원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상권활성화구역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는 개별시장으로 지원되어 오던 방식에서 인근 상점가까지 확대해 그 지역 상권 전체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법이다. 전통시장과 주변상권에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여 상권 매력도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도심 전통시장과 주변상권에 기반인프라 구축 및 경영개선사업을 연계·지원하는 상권 전체의 종합적 지원체계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전통시장 및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을 살펴보고, 특히 개별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인근 상가 밀집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역상권 중심지로 육성하는 제도인 상권활성화 제도 및 선진 사례를 살펴보고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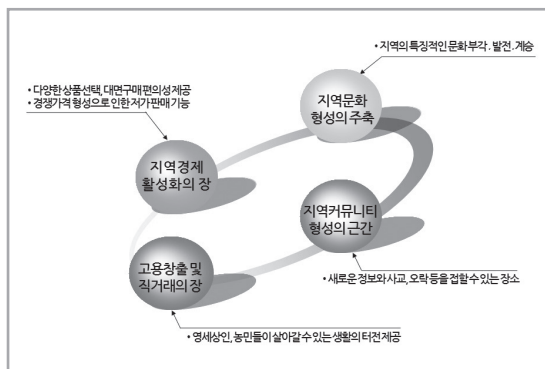
전통시장의 기능 및 침체요인¹⁾

전통시장의 기능은 첫째, 상품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경제적 기능을 하고 있으며, 단순히 물리적 환경에 의해 한정된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 생활양식, 인간행태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구체화한 공간을 의미한다. 즉, 생활양식과 물리적 환경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자연스럽게 형성된 공간이다. 둘째, 만남의 장소로서의 역할과 지역 전통과 문화 보존의 커뮤니티를 담당하는 공간이다. 개인적 상호교류 및 사회적인 오락 등과 같이 도시의 공동체(community)를 형성하는 장소의 총체적 의미이며, 만남의 장소, 오락을 제공하는 즐거운 장소의 기능을 담당하는 공간이다. 즉, 경제적 기능과 함께 지역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사회 문화적 공간으

1) 이용재, 2011,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재정리

로서 복합기능을 수행한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의 장이다. 소비자에게 다양한 상품선택과 대면구매의 편의성을 제공하며, 경쟁가격 형성으로 말미암은 저가 판매 기능 및 중·저소득층에 대한 상품구매기회가 확대되는 공간이다. 넷째, 고용창출 및 직거래의 장으로 생활의 터전이며, 사회복지정책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고용기회 창출의 기능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을 통해 각 지역의 특징적인 문화를 부각할 수 있으며 발전·계승시켜 나갈 수 있는 지역문화 형성의 주축 공간이다.



〈그림 1〉 전통시장의 주요 기능

자료 : 충남발전연구원, 2012, 유구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p.14

전통시장의 침체 요인은 정책적 요인, 외부환경 요인, 내부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책적 요인으로는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전통시장이 쇠퇴한 것이다. 새로운 업태의 등장과 소비자의 기호,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고, 유통시장 개방과 함께 전통시장의 침체가 예견되었음에도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침체한 것이다.

외부환경 요인으로는 대형할인점이나 인터넷쇼핑 등 새로운 경쟁 업태의 등장과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여가시간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는 문화시설로의 유통시설을 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전통시장이 침체하며, 기성 시가지가 쇠퇴하면서 동일 공간에 입지 되어 있는 전통시장이 쇠퇴하는 공간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

내부환경 요인으로는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시설, 관리·서비스 부재, 가격에 대한 불신, 상인들의 학습체제 구축 미비 등을 요인으로 들 수 있다.

선진국 및 대형 할인점의 경우 전문가가 개입하여 효율적인 시장 마케팅과 체계적인 시장관리 등을 실시하는데 비해 대부분 전통시장이 학습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기에 점점 침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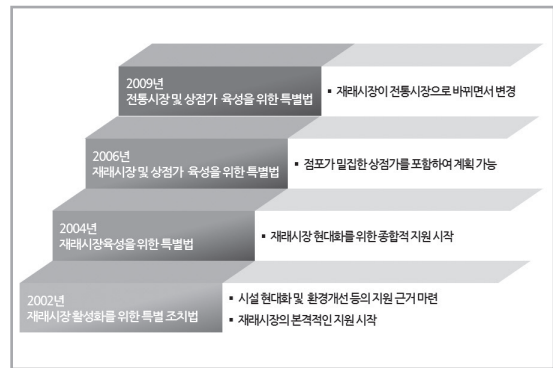
〈표 1〉 전통시장의 침체 요인

구 분	내 용
정책적 요인	• 유통환경에 적극적 대응 미비
외부적 요인	• 경쟁업태의 등장 •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공간 구조적 문제
내부적 요인	• 노후한 전통시장 시설 • 관리·서비스 부재 • 가격에 대한 불신 • 학습체제 구축 미비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 제도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제도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1995. 12. 29)에 시장재개발에 관한 특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2002년 중소기업의 구조개

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이 제정되면서 재래시장의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되었다. 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장경영지원센터의 설치로 시장정비사업(시장재개발 및 재건축)에 추가하여 시장시설현대화 및 시장환경개선 등의 지원 근거 마련되었다. 2004년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시장활성화 종합계획 및 지역시장육성계획의 수립과 시장실태 조사가 시행되었고, 시설현대화사업, 시장환경개선, 시장정비사업, 시장경영현대화사업 등 구체적인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2006년 점포가 밀집한 상점가를 포함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 4. 28)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재래시장에만 한정된 지원이 상점가를 포함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면(area) 단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묶는 ‘시장활성화구역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시장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을 의미하며, 시장의 등록 여부, 개설 주기 및 주체, 상권의 범위 및 특성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이 도입되었다. 2009년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바뀌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되어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상권활성화구역과 상권관리기구가 도입되었다. 전통시장 지원사업은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 시장정비사업,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정비되어 추진되고 있다.



〈그림 2〉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제도
자료 : 충남발전연구원, 2012, 유구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p.18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 정책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전통시장 관련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과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상권활성화 지원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인 ‘문전성시’이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은 경영혁신 지원사업과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인 ‘문전성시’이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은 경영혁신 지원사업과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경영혁신 지원사업은 마케팅, 상인의 교육·연수, 시장관리 점포 경영 선진화로 구분되어 있으며, 마케팅은 공동마케팅, 공동구매 및 특가판매 지원, 시장투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발행 지원, 시장상품정보지, 우수시장 상품전시회 개최에 관한 지원이며, 상인 교육·연수는 상인의 의식변화를 유도, 우수시장 벤치마킹, 조직활성화, 경영활성화 등의 사업, 시장관리 점포 경영선진화

를 위해 시장매니저 채용 지원, 시장 자문 및 점포 디스플레이, 인테리어 지도에 관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주차장, 안전시설, 조명 시설, 아케이드, 진입로 화장실, 고객편의시설 등

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 60%, 지방비 30%, 상인 10%로 지원되고 있다. 기존에는 시설 및 경영 현대화사업을 중점 지원하였으나, 2010년부터 경영 혁신 및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이 새롭게 추진 되고 있다.

〈표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주요내용

분 야	사 업 명		지 원 내 용	지원조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혁신 지원사업	마케팅	공동마케팅	• 세일·경품 행사, 각종 상품 쇼, 홍보사업, 고객조사, 특화사업, 고객참여행사, 고객서비스, 공동쿠폰, 테마골목 육성지원, 다양한 녹색 마케팅 활동 지원, 전통시장 체험학습 지원, 대학 동아리 문화공연	국비 90% 상인 10%
		공동구매 및 특가판매 지원	• 공동구매·판매행사 홍보판촉비 지원 등	국비 90% 상인 10%
		시장투어	• 전통시장과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운영, 시장투어 차량비 및 여행자보험료 지원	국비 100%
		온누리 상품권 지원	• 상품권 발행·취급 수수료 지원	전액보조
		시장상품정보 활성화 (시장정보지)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시책 홍보 • 우수시장 및 상점가의 우수상품 • 발굴·홍보 및 시장소식지 발송	전액보조
		우수시장 상품전시회 개최	• 상인연합회 지회의 지역 우수상품 및 특산물 판매 전시회 개최 비용 지원	국비 70% 상인·지자체 30%
	교육·연수	상인 교육·연수	• 상인대학, 인식변화, 상인조직 활성화, 시장 및 점포경영활성화방안, 우수 시장 벤치마킹 등	국비 100%
	시장 관리 점포 경영 선진화	상인조직 역량 강화	• 상인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시장매니저)을 채용하는 상인회에 인건비 보조	국비 30~70% 상인 30~70%
		시장 자문/점포 지도	【자문】 시설현대화, 경영활성화, 상권개발, 시장정비사업 자문 【지도】 상품디스플레이, 점포 인테리어 등을 지도	국비 100%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 주차장, 전기·가스·소방 등 안전시설, 고효율 LED 조명설치(시장 내 공동구간), 아케이드, 진입로, 공중화장실, 상·하수도, 고객편의시설, 기반 시설 등	국 비 60% 지방비 30% 민 간 10%

※자료 : 중소기업청, 2012, 201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재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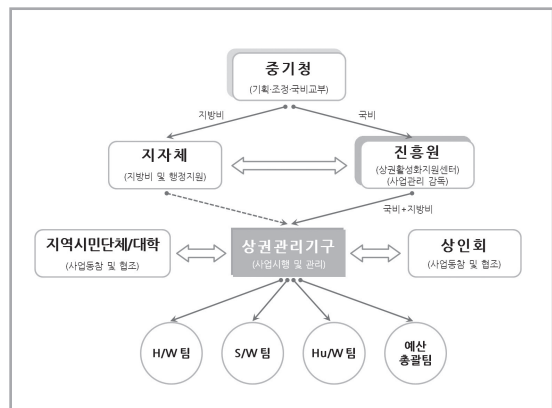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은 2008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통시장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통시장을 고유의 문화전통을 가미해 관광명소로 만들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2012년 기준 시장특성별로 문화관광형시장, 국제명소시장, 향토5일장의 맞춤형 사업을 지원 추진하고 있다. 개별시장 고유의 특성을 발굴·개발하여 전국적인 브랜드를 갖추고

쇼핑과 관광을 할 수 있는 특성화시장을 2015년까지 100개소 육성할 계획이다. 문화관광형시장은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시장을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시장으로 조성하는 것이며, 국제명소시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의 시장을 외국인이 쉽게 찾고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민속5일장은 역사·전통이 있는

5일장에 대해 축제행사, 시장투어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장별 2년간 특화시장 육성사업으로 10억 원 한도(국비기준) 내에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등 콘텐츠 위주로 지원하며, 시장별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2년간 차등 지원하되 필요하면 1년 이내에서 연장하여 지원한다. 2008년부터 약 24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4개 시장을 지원하였고, 충청남도는 2008년 부여시장, 2011년 금산시장, 2012년 공주산성시장이 지원을 받았다.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은 전통시장과 인근 상권 연계 지원을 통해 침체한 상권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지역 커뮤니티 공간 창출하는 사업으로 개별시장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시장과 상권을 연계·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상권의 크기, 특성을 고려하여 고객의 집객력을 높이기 위한 기반인프라 구축 및 경영개선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권활성화 구역 선정 시 경영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한 후 시설현대화사업예산으로 기반인프라 구축 지원한다. 상권활성화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비는 국비 100% 지원이며, 지자체 부담 40% 중 민간부담은 10% 범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1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청은 상권활성화구역 7개를 시범적으로 지정하여 3개년에 걸쳐 지원하였으나, 선정된 7곳 중 6곳³⁾인 경기도 성남시, 강원도 동해시, 충청북도 청주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창원시가 시범지역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은 활성화 구역을 지정 받은 후,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절차로 진행되며, 활성화 구역 선정 기준은 일정 정도의 인프라 구

축 및 추진 주체의 의지가 높은 지역을 우선하여 지정하고,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가 1개 이상 포함되며, 매출액과 인구, 사업체수가 감소한 지역으로 400개 이상의 점포수가 충족된 지역이어야 한다(인구 50만 명 이상일 때 700개 이상의 점포수 충족). 시군구에서 활성화 구역을 지정 승인 후, 시도에서 승인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중기청에서 승인협약이 이루어진다.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후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상권관리기구는 비영리법인(사단, 재단)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또한, 상권관리기구 내 운영을 위한 사무국과 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추진을 위한 상권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상권활성화 협의회는 상권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상권활성화구역 안의 토지 등 소유자, 상인, 거주자 및 상권관리전문가(이하 타운매니저)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 3〉 관리기구운영도

자료 : 시장경영진흥원, 상권활성화 사업설명 PPT 제작성

3) 전북 군산시 대명·신영·평화·영동 상권은 제외

〈표 3〉 중소기업청 지원 전통시장 관련 사업

구 분	내 용
전통시장 및 상점이 활성화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혁신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케팅, 상인의 교육·연수, 시장관리 점포경영선진화 등 •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조명시설, 아케이드, 진입로 화장실, 고객편의시설 등 지원 - 국비 60%, 지방비 30%, 상인 10%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문화를 가미한 전통시장 활성화 • 2012년 시장 특성별 맞춤형 지원 추진(문화관광형시장, 국제명소시장, 향토5일장) • 2008년부터 약 24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4개 시장 지원
상권활성화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시장과 인근 상권 연계 지원 • 기반인프라 구축사업, 경영개선사업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권활성화구역 선정 시 국비 100억 원 이내 지원 - 경영개선사업(40억 원) 우선 지원 - 국비 60%, 지자체 40%(경영개선은 100% 국비) • 2011년 '상권활성화구역' 7개 지정(3개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인 '문전성시'는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2008년 2개 시범시장을 시작으로 23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현재 종료된 사업이다.

추진배경으로는 기존의 상업기반시설 위주의 부분적 시설 개선만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가 어려우므로 기존의 시설현대화나 경영현대화와는 다른 문화마케팅을 통해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즉, 문전성시는 전통시장에 문화의 숨결을 불어넣어 지역문화공간이자 일상의 관광지로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내용으로는 상인참여형 문화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운영(공연, 전시, 문화예술교육 등), 시장별 전통과 특성을 활용한 문화마케팅(스토리텔링 개발 등), 문화적 환경 조성(공공미술, 경관디자인) 등의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사업추진은 주관단체(PM) 및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사업 관리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문화기획, 건축, 도시계획, 스토리텔링, 공공예술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장과 문화 컨설팅단'

이 커뮤니티 활성화, 문화콘텐츠 개발, 문화마케팅 등의 문화적 방법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문전성시 시장은 주민공동체형, 지역관광형, 문화예술형, 문화복지형으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상인이 웃는 시장, 주민이 웃는 시장, 상인과 주민이 함께 웃는 시장의 단계적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사례조사

앞에서 중소기업청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정책을 고찰하였으며, 그 중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은 경기도 성남시, 강원도 동해시, 충청북도 청주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창원시가 추진 운영하고 있다. 성남시는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성남시 상권활성화 재단'을 설립하였으며, 주요사업은 태

〈표 4〉 문전성시 시장의 유형별 구분

구 분	주민공동체형	지역관광형	문화예술형	문화복지형
유형별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본연의 기능을 살려 상인과 상인, 지역주민이 교류하는 지역커뮤니티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과 지역의 문화, 관광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및 문화마케팅을 통한 지역의 관광명소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문화예술인의 창작과 지역주민의 문화향수를 접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문화시장 브랜드 구축 지역거점 문화공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거점으로서 전통시장의 공간과 기능을 문화적으로 활용 민중과 취약계층, 상인에 대한 문화 복지 제고
지원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뿔골시장 수유마을시장 우림시장 진안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주문진시장 한산오일장 부산부전시장 순천옷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구방천시장 가경터미널시장 봉화상설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포자유시장 광주무등시장 하동화개장터
대 상	상인과 지역주민의 파트너십	시장문화자원과 지역인프라 연계	상인과 지역예술가의 파트너십	취약계층 복지와 서민생활안정화

※자료 : 류다혜, 2012,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있어서 프로그램의 유형화에 따른 전략적 기회요소의 도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8

평역~숫골사거리로 이어지는 30만 5천㎡ 수정구 상권을 육성하는 것으로 46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수정로 이면도로를 3개 구역으로 구분해 테마를 살린 상권을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 상인,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와 전문가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민·관·학이 결합한 상권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강원도 동해시는 인구감소 및 상권위축으로 침체하고 있는 발한구(舊)도심권의 상권활성화를 위해 '재단법인 동해중앙시장 상권관리기구'를 설립해 운영 중이며, 2014년까지 국비 53억 원, 지방비 24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기반인프라 구축 사업비는 국비 60%, 지방비 40%를 분담하고, 경영개선사업비는 지방비 부담 없이 국비 100%(17억 원)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다. 상권관리기구의 주요 사업으로 고객 주차장 조성, 특화거리 조성, 핵심점포 유치, 고객문화센터 건립, 캐릭터 및 디자인 개발, 이벤트 행사, 상인 교육 등이며, 다양한

경영개선사업으로 집객 포인트 마련, 유동고객 창출을 통한 상권활성화 선순환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충청북도 청주시는 정감 있고 활력 넘치는 육거리·성안길 상권활성화를 비전으로 전통시장과 인근 상가를 연계 지원해 새로운 '지역커뮤니티' 공간 창출을 위해 4대 세부 목표 ①온몸으로 이룬 정성 고객에게 기쁨 줌, ②하나로 뭉친 마음 신뢰로서 보답, ③새로운 미래혁신 경쟁력의 초석, ④정성 들여 쌓은 노력 으뜸 상권으로 거듭남을 수립하였으며, 4년간 시설 및 경영개선을 위해 123억 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이벤트와 고객유입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도화·용강동 상권을 서울의 대표적인 음식 명물거리 육성을 목표로 "문화와 전통의 맛이 어우러진 활력이 넘치는 상권"의 성공 모델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가 있는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통한 글로벌 문

화환경 및 관광 명소화, 상가주민의 자생력 강화 등을 통한 사람이 모이는 상권 환경 조성을 기본 방향으로 수립하였다.

부산광역시 동구는 지역을 명품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해 조방 상점가와 자유시장을 연계한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받았으며, 교통체계 정비, 문화거리·추억거리, 동천둘레길 조성 등의 사업 계획 추진으로 과거 화려했던 조방 앞의 명성을 되찾고 명품도시 동구를 재창조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경상남도 창원시는 마산합포구 오동동·창동·어시장 일대 6개 시장 51만 9,486㎡를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받았으며, 'The M.A.S.A.N(the Memory of Art, Sense, Aqua, Nature)'의 비전수립으로 예술, 감각, 물, 자연을 테마로 사업을 구상하였다. 상권활성화구역 사업은 기존 개별 시장 단위 지원에서 탈피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상권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각 상권의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5〉 상권활성화 시범지역 사업내용

구분	경기도 성남시	강원도 동해시	충청북도 청주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동구
시설 현대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면도로 특화사업 • 랜드마크사업 • 점포개발사업 • 시민편의증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점포 육성사업 • 에그 프라자 조성사업 • 대중교통접근성 개선사업 • 탁아소 미니도서관 및 커뮤니티 조성사업 • 점포별 관리번호 부여 및 상가 안내도 설치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케이드보수 • 물길조성사업 • 공연무대설치 • 랜드마크조성 • 멀티지원센터 건립 • 미니공원(고객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토리텔링 유형화 • 상인 교육장·회의 공간 마련 • 구역별 특성 살린 골목문화 • 지역자원 및 특산물을 활용한 체험관 건립 및 운영 • 용강-도화동 상점가 연결부 상징성 부여 및 연결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화거리조성 • 전신주 지중화 • 쌈지공원 정비 • 종합안내표지판 설치 • 특화거리 설계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동동소리길 • 어시장·창동 아케이드 • CB센터조성 • 고객휴게문화공간 • 부림시장디자인아트센터 • 창동오동동물길공원 • 창동길, 부림시장디자인길
경영 현대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일상권 통합브랜드 구축 • 스마일 스토리빌리지 육성 • 마케팅혁신사업 • 지역 커뮤니티육성 • 세계 길거리 푸드타운 • 지역 커뮤니티육성 • 세계 길거리 푸드타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거리 발굴을 위한 요리경연대회 사업 • 대신맨 사업 • 예술 문화 창조 사업 • 기업과의 자매결연 • 텃밭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 위탁점포 운영 사업 • 먹거리장터 운영 사업 • 창업인큐베이터 사업 • 동해지역관광지 연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커뮤니티 네트워크 구축 • 빈 점포 활용 커뮤니티 공간 창출 • 상권별 특화 프로그램 • 장보기 대행 서비스 운영 • 고객지원 서비스 운영 • 창업공간 쉼터지 속 • 프로모션 홍보물 제작 • 브랜드 및 캐릭터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토리 발굴 및 적용 • 지역 연계 동아리 육성 • 축제 및 이벤트 개최 • 상권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 인력공동관리·양성 프로그램 • 지역 마일리지 서비스 • 스토리텔링 기념품 제작 및 판매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디자인 개발 • 문화축제 •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 노점상 양성화 • 홍보용 차량 운영 • 안심귀가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차량 운영 • 부림시장디자인아트센터 체험 • 공동디자인개발 • 문신문화체험 프로그램 • 탁아시설 운영 프로그램 • 상인문화동아리 • 주말상설문화 • 상권활성화 축제
상권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권관리기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권관리기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권관리기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권관리기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권관리기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권관리기구 운영

※자료 : 시장경영진흥원, 2011, 6개 지역별 상권활성화 종합계획, 재정리

시사점

본 연구는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 정책 및 상권활성화 지원제도 추진·운영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성, 문화성, 역사성을 고려한 모델을 발굴하고 자생력 있는 운영체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이다.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을 테마로 한 디자인 도입 및 역사자원을 상권활성화 요소로 도입하여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공간을 창출하였으며, 사업지원기간뿐 아니라 사업지원기간 이후에도 자생적으로 지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획 및 추진체계를 수립하였다.

둘째, 여건변화에 대비한 도심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이를 토대로 한 지역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한 것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해 쇠퇴한 상권을 방문객 유입 방안을 모색하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고, 방문객 유입을 위한 지역 정체성 제고와 지역의 스토리텔링을 기본적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셋째, 상권별 개별사업이 아닌 전체 상권을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도시 공간 전체적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도시재생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특화거리 조성 등을 통해 방문객들의 체류시간 증가와 차량 중심이 아닌 도보 중심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과 전통시장 간의 공생발전 모델 수립과 지역의 독특한 문화가 방문객들에게 인지되어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형성시키고, 이는 선순환을 통해 재방문할 수 있는 계획, 독창적인 프로그램 발굴을 통한 상권활성화 관리기구의 수익구조 창출로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상인회 조직의 역량 강화 및 상인주도의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 시장경영진흥원, 상권활성화 사업설명 PPT
 시장경영지원센터, 2008, 지역상권활성화 한국형 모델
 충남발전연구원, 2012, 부여도심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연구
 중소기업청, 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인용, 재정리
 중소기업청, 2012, 2012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재정리
 충남발전연구원, 2012, 유구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충남발전연구원, 2013, 부여도심상권활성화 구역 내 활성화 방안 연구
 시장경영진흥원, 2011, 지역별 상권활성화 종합계획, 성남시, 동해시, 마포구, 동구, 창원시, 청주시
 류다혜, 2012,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있어서 프로그램의 유형화에 따른 전략적 기회요소의 도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용재, 2011,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충청남도 물 복지 향상을 위한 소규모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 관리방안

김영일 | 충남물환경연구센터 책임연구원

1. 서론

기후변화 영향으로 안정적인 수량 확보와 안전한 먹는 물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증가함으로 인해 물 안보와 물 복지에 대한 개념들이 도입되고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는 ‘환경복지’ 실현을 위해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을 현재 58%에서 2017년 80%까지 크게 늘려 전국 어디서나 물 복지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물 복지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충청남도는 농업기반의 산업구조로 농촌 지역에 인구가 분산되어 있어 도시화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2011년 말 기준 상수도 보급률이 87.8%로 물 복지 차원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충청남도 전체 인구의 11.8% 정도가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과 같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전국에서 전라남도 다음으로 높

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적인 여건으로 인해 충청남도에서 물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소규모수도시설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충청남도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상수도 보급률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물 복지 확대를 실현하기 위한 소규모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충청남도 소규모수도시설 현황

2.1 시설현황

농업보조금이란 우리나라 혹은 특정지역의 농업 충청남도에 설치된 소규모수도시설은 2012년 말 기준으로 1,965개소, 시설용량 99,499 m³/일, 급수인구 220,113명이다. 마을상수도 시설수 및 급수인구는 천안시, 예산군, 논산시에 많은 반면, 시

※ 본 글은 충남발전연구원 수탁과제(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 · 관리방안 및 보안시설 설치지침 작성)의 연구결과를 수정 · 보완하여 작성한 글이며, 모든 표와 그림은 최종보고서에서 발췌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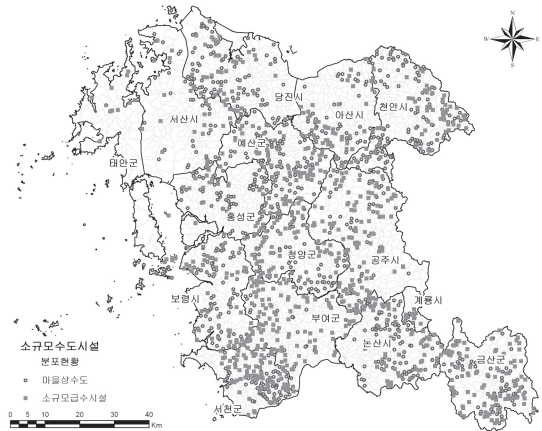
- 1)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함
-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 · 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함
- 3) “소규모수도시설”이란 수도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통칭하여 사용함

설용량은 당진시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천안시, 논산시 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규모급수시설

시설수, 급수인구 및 시설용량은 모두 공주시와 부여군이 많거나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충청남도 소규모수도시설 현황

구 분	시설수 (개소)	시설용량 (m3/일)	급수인구 (명)
계	1,965	99,499	220,113
마을상수도	1,004	69,860	157,137
소규모급수시설	961	29,639	62,9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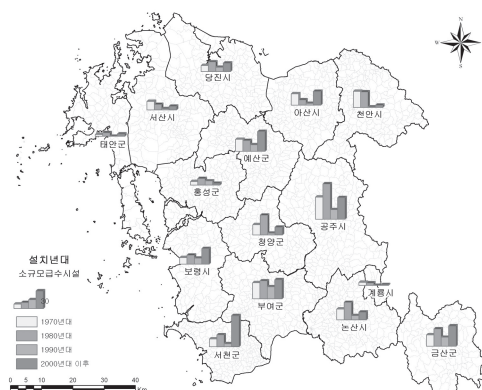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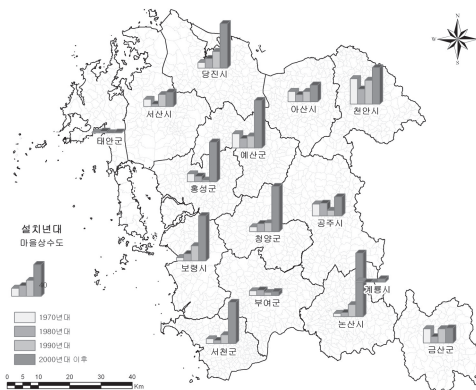


〈그림 1〉 충청남도 소규모수도시설 분포현황

2.2 설치년도 현황

소규모수도시설 가운데 마을상수도는 2000년대 이후, 소규모급수시설은 1980년대에 설치된 시설이 많아 마을상수도에 비해 소규모급수시설의 노후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규모수도시설이 설치된 지 20년 이상(1990년대 이전에 설치)된 노후

시설이 전체시설의 약 42%를 차지하였으며, 소규모급수시설은 약 58%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상수도는 논산시가 2000년대 이후에 설치된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금산군이 가장 낮았으며, 소규모급수시설은 서천군이 2000년대 이후에 설치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천안시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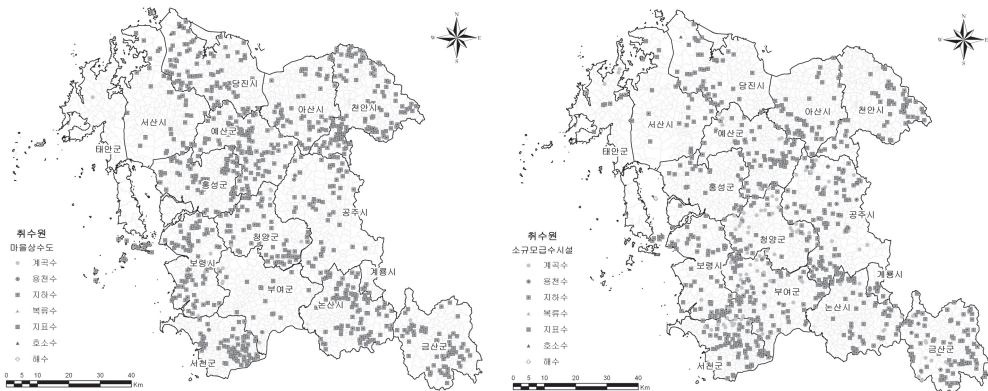


〈그림 2〉 충청남도 소규모수도시설 설치년도 분포현황

2.3 취수원 현황

소규모수도시설은 대부분 취수원으로 지하수를 사용하였으며, 일부 시·군에서 계곡수, 용천수, 호소수 등을 사용하였다. 마을상수도에 비해 소규모

모급수시설의 취수원이 다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곡수를 사용하는 비율도 높았으며, 계곡수는 부여군, 용천수는 공주시가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 충청남도 소규모수도시설 취수원 분포현황

2.4 정수시설 현황

소규모수도시설은 대부분 정수처리 없이 소독처리 후 급수하고 있으며, 완속 및 급속여과, 막여과, 이온교환, 흡착 및 폭기 등 다양한 정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비율이 약 7.8%정도에 불과한 것으

로 나타났다. 정수시설 가운데 완속 및 급속여과 시설은 천안시, 막여과시설은 금산군, 이온교환처리시설은 논산시, 흡착 및 폭기시설은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 등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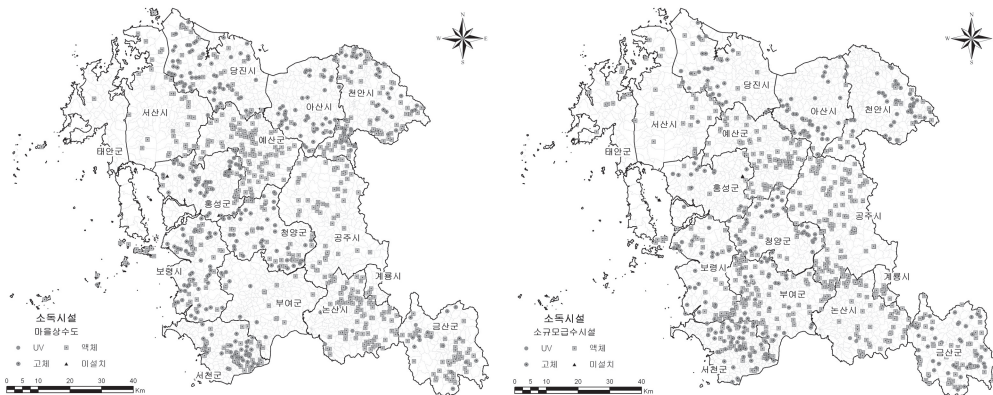


〈그림 4〉 충청남도 소규모수도시설 정수시설 분포현황

2.5 소독시설 현황

소규모수도시설의 소독시설은 대부분 고체 또는 액체염소 형태의 소독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체 시설의 약 61% 정도가 액체염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군에서는 소독시설로 자외선(UV)을 이용하고 있는 반면, 소독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수도시설이 존재하는 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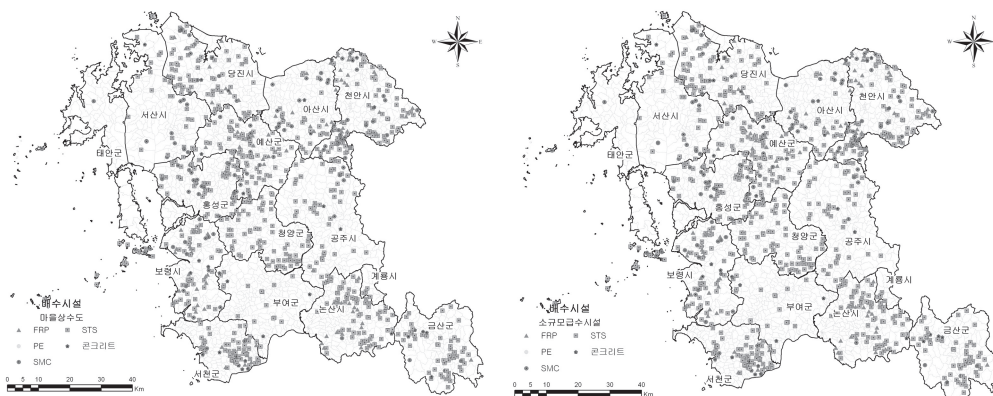


〈그림 5〉 충청남도 소규모수도시설 소독시설 분포현황

2.6 배수시설 현황

소규모수도시설은 배수시설로 STS, SMC, PE, FRP, 콘크리트 등 다양한 배수조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체 시설의 약 72% 정도가 STS 배수조를 사

용하고 있다. 청양군은 소규모수도시설 대부분이 STS 배수조를 사용하고 있으며, PE 배수조는 아산시와 논산시, FRP 배수조는 천안시, 아산시, 콘크리트 배수조는 공주시, 서천군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6〉 충청남도 소규모수도시설 배수시설 분포현황

2.7 수질현황

전체 소규모수도시설의 약 16%가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주요 수질초과 항목은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불소, 비소, 질산성질소, 기타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질초과 항목 가운

데 비소가 전체의 약 41%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질산성 질소 순이었다. 천안시가 수질초과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태안군, 금산군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충청남도 소규모수도시설 수질초과시설 분포현황

2.8 운영관리 현황

소규모수도시설은 운영관리 주체에 따라 자체 (자치단체)운영, 위탁관리, 주민대표 등 크게 3가

지 유형으로 운영·관리되고 있으며, 소규모수도 시설을 자체 운영하는 비율이 약 45%로 가장 높고, 위탁관리가 약 34%, 주민대표가 약 21%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 충청남도 소규모수도시설 운영관리 분포현황

3. 소규모수도시설 운영·관리현황 분석

3.1 소규모수도시설 개발 관리 이원화

소규모수도시설의 신설은 농림부서에서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기존 소규모수도시설의 개선 및 개량사업은 상수도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원화된 추진체계로 인해 사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추진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소규모수도시설의 신규설치를 담당하는 부서와 개량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더라도 수도정비기본계획과의 연계성, 대상지역 및 적정 공정의 선정, 유지관리 등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의 일관성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3.2 소규모수도시설 현황자료 관리

소규모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부서가 이원화되어 있고,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소규모수도시설 현황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시설의 신설 및 폐쇄와 같은 정보를 빠르게 업데이트 하지 못해 실제 현황과 목록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수도시설 전체를 시·군 담당자 1인이 관리하고 있어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경우에는

전체 소규모수도시설의 현황 및 공간적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데 시간적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명이 대부분 마을이름 등으로 불리고 있어 업무담당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3.3 시설현황 분석

소규모수도시설 가운데 2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 전체의 약 42%, 특히, 소규모급수시설은 전체의 약 58%를 차지하고 있어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지속적인 개량사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의 노후된 콘크리트 배수조는 벽 표면이 함몰되거나 방수도막이 파손되어 누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FRP 및 PE 배수조도 덮개가 부실하여 빗물이 스며들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배수조 교체를 위한 개량사업의 우선적인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전체 소규모급수시설의 약 13% 정도가 취수원으로 계곡수를 사용하고 있어 가뭄 등 계절변화에 의해 수량변동이 심하고 장마철 등에는 탁도 유입 등으로 인해 수질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소규모수도시설의 주요 취수원인 지하수 관정 부근에 농경지와 축사 등이 위치하고 있어 질산성질소 및 총대장균군 초과와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하수 수질은 점차 악화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수도시설에 정수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일부에 불과해 항상 수질문제에 노출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소규모수도시설이 정

수시설의 설치 없이 소독처리만 수행하고 있어 다양한 수질변화에 따른 수질기준 만족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3.4 소규모수도시설 운영 · 관리 현황 분석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책임은 자치단체에 있으나, 시설수가 많고 담당자가 부족하여 시설의 운영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시설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해결차원에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자치단체의 관리인력 부족으로 인해 일부 시설은 주민대표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민대표가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문성 부족으로 시설의 원활한 운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속한 대처에 한계가 있고, 시설관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시설의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소규모수도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업체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주기적인 순회점검, 기계 및 약품관리, 취수원(관정)관리, 물탱크 및 시설주변 청소 등을 수행하고 있다.

4. 소규모수도시설 운영 · 관리 방안

4.1 소규모수도시설 개발 및 관리 일원화

소규모수도시설의 개발 및 관리(개선 및 개량) 업무를 시 · 군 상수도 주관부서에서 담당하도록 일원화하여야 하며, 소규모수도시설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대상지역 선정, 적정 공정의 선정 및 관리 등의 업무를 하나의 부서에서 계획부터 운영까지 전담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시 · 군에서는 ‘소규모수도시설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신규사업 계획 및 개량계획 등의 검토 및 자문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 및 업무를 강제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시 · 군에서는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의 대상지구 결정 및 예산신청 이전에 소규모수도시설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사업을 확정하도록 규정화하여야 하며, 아울러 소규모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소규모수도시설의 기술진단 및 평가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SMART 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

소규모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물 정보에 대한 내용을 삽입한 QR코드⁴⁾를 소규모수도시설(물탱크 및 지하수관정)에 부착하여 관리하는 SMART 시설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담당자 변경에 따른 시설물 누락 및 업데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

4) QR(Quick Response)코드는 기존 바코드의 용량제한을 극복하고 형식과 내용을 확장하여 흑백 격자무늬 패턴으로 정보를 나타내는 매트릭스 형태의 2차원 바코드로 숫자 이외에 문자의 데이터 저장 가능

설의 민간위탁관리를 추진함에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충청남도에서 추진 중인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과 연계하면 소규모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스마트 현장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3 소규모수도시설의 개량

소규모수도시설의 노후화 비율이 높기 때문에 환경부 및 자치단체(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수질초과시설과 노후시설을 중심으로 개량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수질초과시설은 대체(신규) 관정의 개발, 막여과시설, 소독시설 설치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노후시설은 30년 이상 된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개량하여야 한다. 개량사업은 수질기준 초과항목 및 횡수, 노후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데,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을 가장 최우선으로 개량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수동소독시설이 설치된 시설, 20년 이상 된 노후시설 순으로 개량하여야 한다. 특히, 소규모수도시설의 개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상수도가 공급될 예정인 지역은 신규설치 및 개량사업 추진 시 관로시설을 지방상수도 시설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취수원으로 계곡수, 복류수 및 용천수를 사용하는 시설은 암반관정지하수로 취수원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계곡수를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수량변동 및 수질오염 등의 문제가 지

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수량 및 수질확보를 위해 지하수로 취수원으로 반드시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지하수를 취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 가운데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소규모수도시설은 수질 초과항목에 따라 정수처리방법을 선정하여 설치하고, 고체염소 자동투입기를 액체염소 자동투입기로 모두 교체하여야 하며, 소독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액체염소를 자주 보충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4.4 소규모수도시설 운영·관리 방안

소규모수도시설은 현행법상 자치단체에서 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으나, 담당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주기적으로 순회점검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주민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민간에게 적극적으로 위탁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득이하게 주민대표가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운영관리에 대한 지침서를 만들어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시설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소규모수도시설이 대부분 시·군 지역에 넓게 산재하고 있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시설 중에서 수량이 풍부한 시설을 중심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규 설치 및 개량한 시설이나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 시설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소규모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자동측정기기 등을 부착하여 무인자동화가 가능한 통합관

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충청남도는 농촌지역에 인구가 분산되어 있고 도시화율이 낮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소규모수도시설의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물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소규모수도시설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소규모수도시설과 관련된 업무(신설 및 개량)의 일관된 추진을 위해 관련부서를 일원화하는 것이 시급하며,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수질초과시설과 노후시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개량사업을 통하여 안전하고 안

정적인 먹는 물의 확보를 통한 주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제한적인 재정여건 속에서도 소규모수도시설의 신규설치 및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소규모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위해 민간 위탁관리를 추진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소규모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충청남도는 상수도 보급률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충청남도민의 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충남발전연구원, 2008, 충청남도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실태 및 관리방안
 충청남도, 2013, 행정자료
 충청남도, 2013,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방안 및 보안시설 설치지침 작성.
 한국환경공단·대한상하수도학회, 2010,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환경부, 2012, 2011상수도통계
 환경부·농림수산식품부, 2008, 소규모수도시설운영관리방안
 환경부 보도자료, 2013,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행복을 완성하는 '환경복지' 실현

충청남도 하천관리를 위한 도랑살리기의 필요성

김홍수 | 충남물환경연구센터 책임연구원

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경제발전 위주의 국토 개발로 인해 하천유량이 감소하였고 오염이 심화되어 하천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그동안 하천관리는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이수와 치수 기능을 위주로 관리하여 왔으나, 최근 하천을 둘러싼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하천관리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먼저, 이수와 치수 중심에서 하천의 생태환경 기능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자연형 하천정비를 통해 하천의 기능을 회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행정구역별 하천 관리에서 수계별, 유역별 하천관리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하천관리 패러다임이 바뀌고 이에 따라 많은 하천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국가 하천사업의 전반적인 틀과 많은 사업들이 새로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아직도 과거의 관행을 계속하고 있다. 유역단위 통합관리를 천명하고 있지만 하천관리 체계는 부처별, 행정구역별로 분리되어 있고, 유역단위 치수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하천관리의 구체적인 방침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원칙과 방향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중앙부처의 경우 환경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소방방재청)가 독립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동일한 하천과 유역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상호연계성 없이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역단위에서는 하나의 하천이 행정구역별로 분절되어 서로 다른 목표와 방법으로 관리되는 것이 비일비재하여, 실제 공사가 시행되는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올바른 지침이나 방향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최종진 등, 2005).

특히 도랑은 대체로 자연성이 매우 우수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역의 싹틔줄이자 본류하천의 모태로서의 기능을 가진 중요한 대상이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이 거주하는 마을 주변의 도랑이 생활하수, 축산폐수, 농경지로부터 비료, 농약 등이 유입되어 수질이 악화되고,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소각, 야적물 방치로 미관이 훼손되어 왔다. 또한 마을도로 확장을 위한 도랑 복개, 콘크리트 제방 설치로 인해 도랑의 원형이 훼손되고 건천화가 진행되었다.

소하천보다 작은 도랑의 관리와 복원은 우리나라 하천사업에서 가장 도외시 되어왔으며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상대적으로 관심과 투자가 미흡,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랑의 생태복원을 위한 바람직한 지침의 마련과 하수로 기능으로 전략하는 도랑에 생명력을 부여함으로써 물길 상류로부터 하류지역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2. 도랑의 정의

우리나라 하천은 하천법에 의한 법정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으로 구분된다. 법정하천은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하천과 시도지사가 정하는 지방하천으로 나뉘며, 소하천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그 명칭과 구간을 정하여 소하천으로 지정·고시하는 하천으로 정의할 수 있다. 소하천의 지정기준은 소하천정비법에 일시적이 아닌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으로 평균 하천 폭이 2m 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전체 길이가 500m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다만 재해 예방이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하천으로 지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소하천으로 지정한 자에 의해 관리 및 정비가 되고 있다. 이에 반해 도랑은 하천법이나 소하천정비법에서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 없이 소하천, 실개천, 구거들을 혼용하고 있다.

도랑을 일부 단체에서는 소하천 중에서 관리가 되지 않고 정부에 등록되지 않으며 폭이 5m내외, 평균수심 최소 10cm이상인 농촌마을 앞을 지나는 소하천으로 정의하거나 마을을 낀 작은 개울로 보통 폭이 2~3m, 길이 500m 정도이며, 과거에는 생활의 근거지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3. 도랑살리기의 필요성

도랑은 빗물이 모여 처음으로 하천의 형태를 나타내는 곳으로 하천이 시작되는 곳이라 할 수 있으며, 도랑살리기를 통해 상류가 깨끗한 상태로 바뀔으로써 하류에 해당하는 지방하천 또는 국가하천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하천 환경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도랑의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를 위한 도랑의 실태 조사, 정화 복원을 통해 체계적인 물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마을단위 공동체성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에서 도랑살리기 운동을 통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동참시킴으로써 마을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민, 관, 기업,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 공동체 회복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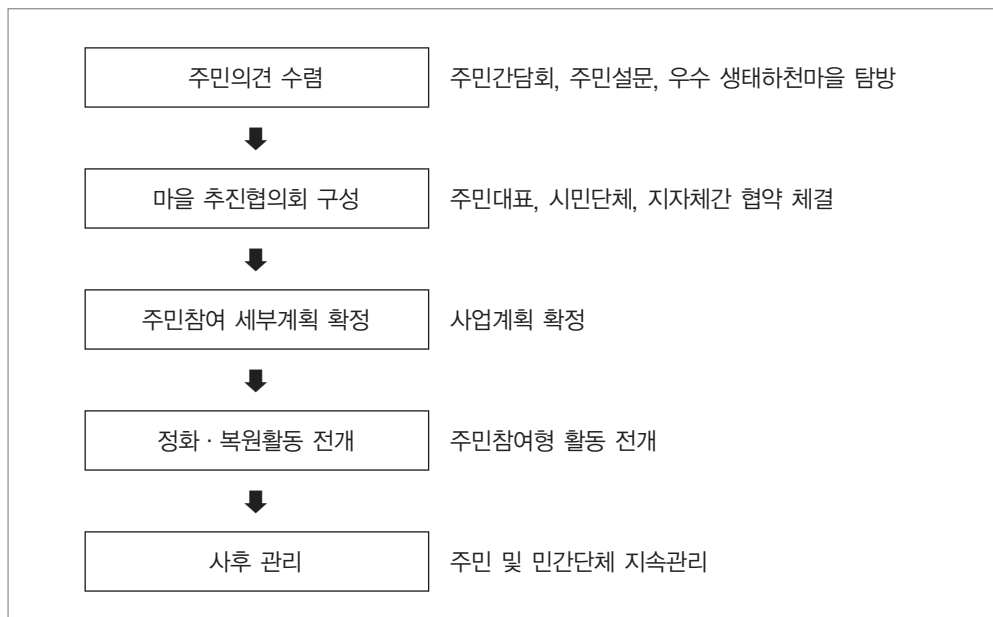
이처럼 도랑살리기는 주민참여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그 역할 또한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적절한 동기부여를 통해 주민이 자발적으로 오염물질을 관리하고 정화함으로써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모범적인 사례를 통해 도랑의 생태적 복원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충청남도의 도랑살리기 추진 현황

1) 기본방향

충청남도는 오염·훼손된 도랑의 복원을 통하여 인근 하천과의 생태적 연결성을 강화하고 마을 공동체 활동으로 자율적인 정화·복원체계를 선(先) 구축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였다. 이에 마을 도랑을 생태적인 생활공간으로 회복하고 농촌공동체적 삶의 중심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상수원 및 수계에

직접적 영향이 있는 오염·훼손 도랑을 선정 및 생태복원 활동을 추진하고 복원사업 이후 지속적인 관리기반 마련, 수생태복원 홍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물길 최상류부터의 복원을 통한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랑살리기 추진체계도

2) 추진현황

충청남도는 도랑의 정화 및 복원사업으로 2008년과 2009년 마을 주민 참여하에 자연석, 식생매트 설치, 퇴적토 준설, 쓰레기 수거 등의 '가재가 돌아오는 도랑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1년에는 아산시 배두실마을, 느릅실마을, 창터마을의 3개 마을에 대한 도랑 복원 사업이 모범사례로

추진되었다. 2012년에는 6개 시·군 10개 마을의 도랑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민, 관, 기업이 함께하는 도랑살리기 5개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도랑살리기 전수조사, 물길지도 작성, 도랑살리기 운동 전개, 주민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 하도록 계획하였다.

〈표 1〉 2012년 시범사업 추진현황

구 분	위 치	도 량 명	사업기간	비 고
공주시	이인면 구암리	배작골	'12년	
아산시	도고면 시전1리	동막	'12년	
	영인면 아산1리	송화	'12년	
서산시	음암면 탑곡	송내	'12년	
논산시	가야곡면 삼전리	삼전	'12년	
청양군	대치면 이화리	작은전이골	'12년	
	정산면 남천리	바둑골		
	비봉면 관산,록평	가나골		
예산군	고덕면 호음2리	호음	'12년	
	신양면 불원리	숲모랭이	'12년	

5. 도랑살리기의 바람직한 방향

도랑살리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생태복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한 예산지원이 복원사업 추진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진정한 하천복원은 소수의 행정가들과 전문가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천과 관련된 다양한 집단 사이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달성된다. 이해 당사자의 동의는 물론 유역주민들의 합의와 참여를 모아내는 일이 복원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은 우리보다 앞서 하천복원을 시작했던 선진국들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구성원으로서 하천과 가장 직접적으로 교감하는 집단에 속한다. 하지만 이들은 하천복원 계획수립 단계는 물론 실행 및 사후관리 단계에서 소외되거나 형식적인 의견수렴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하천복원 패러다임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복원사업을 지역주민, 전문가, 민간단체 등이 주도하고 국

가와 지자체는 이를 지원하는 체계로 점진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도랑살리기를 추진한 마을에서는 도랑살리기 운동으로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마을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로의 발전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6. 마치며

도랑은 유역의 싹틔줄이자 본류하천의 뿌리로서 그 역할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관리가 가장 미흡한 상태이다. 최근 몇 년간 각 부처별로 유사한 사업을 통해 하천복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하천정비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과 이·치수 위주의 관점으로 추진되고 있어 친환경적인 의미가 실제 사업에서 아직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천복원은 반드시 생태적 접근으로 유역규모에서 실행되어야 하며 명확한 목표 하에 충분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하천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기본방향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하천복원은 하천의 구조와 기능을 과거의 교란되지 않은 상태로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현실적인 목표 하에서 추진하되 건강성의 회복이라는 목적을 잃지 않아야 한다. 하천복원은 사업의 완료와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참여와 교육의 장으로서 지속가능한 하천의 모습을 유지하도록 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도랑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자기 마을 도랑 사정에 가장 밝은 주민들과 대화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여기에 전문가와 환경운동 활동가가 함께 고민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해 예산을 조달하는 등의 협조를 통해 도랑살리기를 위한 ‘유역 공동체’ 운영을 실현하고 마을 도랑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충청남도에는 3~4만개의 도랑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하·폐수, 축산폐수, 쓰레기 등으로 오염이 심화되고 있으나 도랑에 대한 법·제

도의 미흡과 예산 부족 등으로 관리가 소홀한 실정이다.

이에 충청남도는 도랑 전수조사 및 물길지도 작성으로 물길과 오염원 흐름을 분석하여 도랑 복원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하천 환경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도랑에 대한 체계적 복원활동으로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여야 한다. 또한 주민참여형 도랑 살리기 활동을 통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복원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최종진 외, 2005, “효율적인 하천 유지관리 방안”, 경기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서동일, 2009, “우리나라 하천관리를 위한 소하천 관리의 필요성”,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제42권 제5호.
 황순진, 2009, “하천 생태복원에 있어 소하천의 중요성”,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제42권 제5호.
 이용곤, 2011, “경상남도 도랑살리기 현황과 과제”, 경남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
 충남도청 내부자료, 2012.



인정 넘치고 아름다운 충남의 알프스,

칠갑산 산꽃마을

정봉희 | 충남발전연구원 홍보팀장

충남 청양에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말 그대로 아름다운 벚꽃길이 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엔 충남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꽃동네가 있는데, 바로 '칠갑산 산꽃마을'이다.

마치 흰눈이 날리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아름다운 벚꽃과 울긋불긋 마을 한가득 피어있는 봄꽃으로 옷을 갈아입은 산골마을이었다.

얘기를 들어보니 언제부터인가 유명세를 타기 시작해서 한해에도 많은 방문객이 찾는 북적북적한 마을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이 마을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장광석 위원장(51세)을 만나러 찾아갔다.

장 위원장은 미소가 아주 매력적이셨다. 알고보니 이 마을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계속 살아온 토종 산꽃마을 주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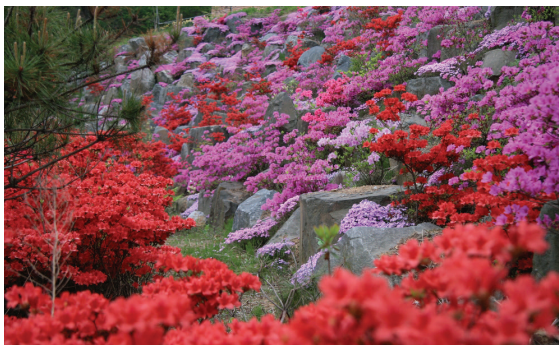


〈칠갑산 산꽃마을 장광석 운영위원장〉

장 위원장은 젊은 시절 군 제대 이후 마을주민들의 인식을 좀 바꿔보면서 생산하는 작목 등을 다양화하고 싶어 했다. “그런데 같이 일하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이런저런 구상도 여러 차례 해봤는데 실패만 했다.”면서 “우리 마을이 2004년 산촌생태마을로 지정되면서 마을어르신들께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 해야 한다며 저를 추진위원장으로 추천하면서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칠갑산 산꽃마을은 밭에서 쇠를 캐내었다고 하여 붙여진 ‘쇠밭’과 길고 큰 밭이 있다하여 붙여진 ‘넓은밭’, 2개의 작은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아름다운 벚꽃길과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이라는 고향의 향수를 담아 꽃이란 테마를 통해 산촌마을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칠갑산의 명성을 살려 ‘칠갑산 산꽃마을’이란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울긋불긋 아름답게 피어난 산꽃마을 풍경〉

마을을 둘러보니 예전과는 많이 다른 모습으로 보였다. 일단 총41가구 96명의 마을주민이 살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이 마을로 귀농귀촌한 7가구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 마을추진위원회에서 방문객을 맞이할 다양한 시설과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었다. 주요 시설로는 방문객 숙박동(35평 1동, 20평 1동, 7평 4동), 식당(실내 40평, 야외 몽골천막 6동), 교육장(40평, 음향시설 완비), 체험장(야생화전시장, 연꽃단지, 물탕골, 고산굴, 표고버섯재배사 등) 등이 있다.



〈산꽃마을의 다양한 시설 및 체험장 모습〉

특히 산꽃마을의 특징을 가장 잘 살린 ‘꽃사탕 만들기’ 체험은 식용꽃으로 세상에서 하나뿐인 꽃사탕을 만들어보는 인기 만점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야생화전시장에서는 야생화 화분만들기 체험을 통해 집에서 마을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계절마다 산나물 뜯기, 화전 만들기, 밤줍기, 표고버섯 수확하기, 고추따기 등 다양한 농사체험을 비롯, 간절히 원하는 소원은 꼭 이루어진다는 물탕골순채体验和 사랑을 확고히 맺어준다는 고산굴체험도 빠질 수 없는 프로그램이다.



〈야생화전시장에서는 다양한 야생화를 직접 감상할 수 있고 화분만들기체험도 가능하다〉

필자가 찾은 날엔 봄철 농번기를 맞아 농촌봉사활동에 나선 기관이 방문해 더욱 활기를 띠었고, 하루 동안 농사일도 돕고 야생화전시관에 들러 화분만들기 체험도 가졌다.

장 위원장은 “2005년 산촌생태마을, 2006년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정 이후 마을 주민들은 달라졌어요. 물론 힘들었죠. 많은 교육과 견학, 주민과 같이 하는 행사, 주민회의 등을 통해 마을사업의 필요성도 서로 알게 되었고 합심해서 참여하기에 지금은 너무나 행복합니다.”라고 말한다.

방문객이 가장 많은 계절은 역시 봄이었지만 주로 4월부터 10월이 가장 바쁘다고 한다. 연간 15,000명의 방문객이 찾아오고 약 2억원의 매출이 생긴다고 한다.



장 위원장은 “그래도 매년 체험객 방문이나 특산품 판매(토종별꽃, 알밤, 고추, 표고버섯 등)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올해부터 청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콩시범마을로 선정되면 콩과 관련한 고부가가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라고 밝혔다. 물론 무엇보다 주민들의 농업작목을 꽃과 관련된 부가가치 높은 사업에 가장 관심이 많다고도 했다.

이곳 산꽃마을은 방문객이 하룻밤 머물다 갈 수 있는 시설이 충분하다. 그리고 주변에 관광코스도 다양해서 휴가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필자가 장 위원장에게 살짝 물어보았다. 좋은 1박 2일 코스 좀 소개시켜달라고 말이다. 그랬더니 먼저 산꽃마을-장곡사-칠갑산-출렁다리 등의 여유로운 코스와 산꽃마을-장곡사-고추문화마을-고운식물원-천문대-칠갑산-출렁다리 등 활동적인(?) 코스를 알려 주셨다. 그러면서도 그냥 산꽃마을에서 조용히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면서 강추(?)하셨다.



인정 넘치는 아름다운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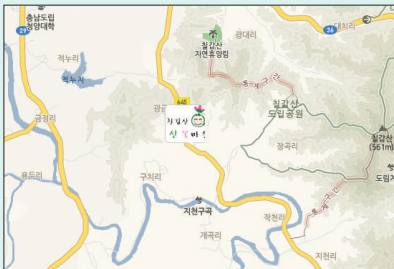
장 위원장은 산꽃마을을 한마디로 “인정 넘치는 아름다운 마을”이라고 말했다. 또 그렇게 만들고 싶다는 의지도 보였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위원장을 할지는 모르지만 마을주민의 행복을 위해 소신껏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욕심을 버리고 마을주민만을 생각하면 다 가능할 것이라

고 믿었다.

단순히 한국의 아름다운 길 주변마을에서 그 아름다운 길을 마을 입구로 만들어버린 칠갑산 산꽃마을의 힘은 바로 마을주민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외부의 도움보다 스스로 마을을 가꾸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아는 참 예쁜 마을이다. 적어도 필자는 이 마을을 매년 방문해보고 싶은 맘이니까 말이다.



[칠갑산 산꽃마을...]



● 찾아가는 길

칠갑산 산꽃마을은 말 그대로 산촌마을이다. 그래서 특별히 이정표가 많이 없다는 게 특색(?)이다. 청양 장곡사에서 645번 지방도로를 타고 오다보면 마을 이정표가 보인다. “한국의 아름다운 길” 이정표가 계속 보일것이다.

- ▶ 주소 : 충남 청양군 대치면 광곡리 90-4 (T.041-944-2007)
- ▶ 홈페이지 : www.sankkot.com



● 주변 관광지

- ▶ 출렁다리 : 국내최장 출렁다리로 청양을 상징하는 고추모형의 주탑을 통과한 후 천장호를 가로지르며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다.
- ▶ 고운식물원 :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식물원으로 산악지형을 그대로 살린 11만평 규모, 6,200여종의 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 ▶ 청양천문대 : 청정 청양의 밤하늘을 관찰하며 아름다운 꿈을 키울 수 있는 곳이다.
- ▶ 장승공원 : 청양의 장승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조성한 공원으로, 칠갑산 장곡사 초입에 위치, 매년 4월 장승문화축제가 열린다.

내포문화 콘텐츠 구축에 관한 단상

오석민 | 충남역사박물관장



최근 충청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였고, 이미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이 국가의 법정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는 예산확보 등으로 개발사업의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도청 이전이라는 대역사를 완료하였고,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행렬은 증가일로이다. 그 가운데 관광객이 차지하는 숫자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러한 가운데 내포문화에 대한 기초연구는 미진하기만 하다. 다만 기왕에 연구가 진행된 분야에 반복적으로 여러 편의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을 뿐이다. 아직까지 '내포'라는 지명의 유래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조사가 없음은 내포문화에 대한 연구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종합적인 조사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필자의 견해는 부정적이다.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대중서를 편찬하는 사업이라면 더욱 그렇다. 분야에 따라서 기존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있어서 그 결과물을 정리하면 되는 분야와 주제도 있겠지만, 아직 첫 단추도 꿰지 못한 분야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도지, 시군지, 읍면지 발간을 통하여 역사적 정체성이 확인될 수 있을까?

혹자는 최근 지역의 역사를 아우르는 연구결과의 집대성, 예컨대 시·도지, 또는 시·군



지, 나아가서 읍·면지를 간행하는 작업을 강조하기도 한다. 미시적인 연구가 축적되면 자연스럽게 지역의 특성이 드러날 것이라는 기대가 섞인 셈이다. 필자는 이러한 기대를 아마 추어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기왕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책자는 기존 연구결과를 정리하는 작업일 뿐이었다. 연구가 진척되지 못한 분야의 경우에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연구비로는 기초적인 조사조차 힘든 경우가 태반이고, 설령 연구비에 연연하지 않는 연구자라 할지라도 1년에도 미치지 않는 조사기간에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고 정리하는 작업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실은 더 부정적이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시·군지 등은 전문적인 논문이 아니고, 다만 일반인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소개책자를 발간하는 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다른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물론 새로운 자료들을 발굴하고 정리하는 연구자들을 폄하할 생각은 없다. 그런 경우에도, 그들의 작업은 새로운 연구를 위한 예비 수준을 벗어나기는 어렵다. 자신에게 할애된 지면의 제약도 있고, 또한 수집한 관련 자료를 모두 정리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사실 특정 지역에 대한 연구에서 미진한 분야는 다소의 식견만 갖춘 전문가라면 어렵지 않게 지목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내포지역을 대상으로 한 경우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미진한 분야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보충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사실 지역 연구에 있어서 분야별 편차는 심각할 정도이다. 그 지역을 특징짓는 분야에 대해서도 기초적인 조사조차 시행되지 않는 경우는 허다하다. 혹자는 연구비의 지원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노력에 비하여 연구성과가 널리 알려지지 않는 분야, 예컨대 사회적 관심이 적은 분야를 피하려는 연구자들의 자세 또한 지적하여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두가 참여하여 머리를 맞대면 좋은 연구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연구주제를 발굴하고, 연구가 미진한 분야를 기꺼이 맡아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



다.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집성(集成) 또는 대계(大系)와 같은 책자의 발간은 그 이후의 작업이다. 그 이전에 마치 특정한 사냥감을 바로보는 맹수처럼 필요한 작업을 짚어 내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 필자가 바라보는 한 연구의 편향성은 심각할 정도이다. 기초조사의 미흡함을 내포에서 출생한 대학자 추사 김정희의 잘 알려지지 않는 유적들을 사례로 들면서 살펴보도록 하자.

추사는 고향에서 무엇을 했을까?

충남 예산 태생의 추사 김정희만큼 많이 회자되는 인물도 드물다. 국내에서의 활동보다 연경을 출입하면서 당대의 석학들과 교유하면서 청나라의 고증학을 만개시킨 학자로 칭송되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금석학에 대한 기념비적 논고를 남겼고, 추사체라는 독특한 서체도 만들었다. 그런 까닭에 청나라의 이름난 학자들조차 '海東第一通儒', 즉 해동에서 제일 가는 해박한 지식의 소유자라 칭송했던 것이다. 실사구시의 학풍을 통하여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으니, 그 후대의 정치·사상·예술계의 대가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그런데 막상 미진한 구석이 있다. 그는 과연 고향땅 충청도와 어떤 관계를 맺었을까? 막상 충청도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응당 느끼는 의문일 것이다. 덧붙이자면, 그의 위대한 업적들은 경향 각처의 전문가들로부터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정작 도민에게 궁금한 점은 고향 땅에서의 행적일지 모르겠다. 특히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또는 유적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1976년 성역화 사업 당시 무분별하게 매립된 왕자못(王子池)이 대표적이다. 추사고택 인근의 왕자못은 조선시대 지리지와 고지도마다 거의 빠짐없이 확인되는데, 또한 조선전기 예산이 배출한 명필 자암 김구 선생이 운명한 별장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추사의 큰댁이 위치한 서산 음암면 유계리의 한다리 마을의 바위에는 추사 선생이 쓴 것이라 전하는 취석(醉石)이라는 글씨가 전한다. 경주 김씨 입향조 김연을 안고 친정으로 낙향한 상산황씨의 묘비는 추사 선생이 제주도에 유배당해 있을 때 사람을 보내어 받은 글씨이다. 그 묘역은 개심사 본전에서 불과 50m도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있다. 개심사가 본래 한다리 김씨의 원찰이었기 때문이다. 서산 대산읍에도 1826년 추사 선생이 충청우도의 암행어사로 왔을 때 세금을 경감하여 준 공적을 기리는 영세불망비가 전한다. 지역사와 지역문화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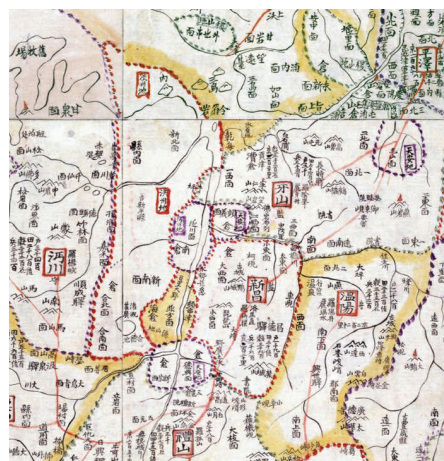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들은 필자가 단독으로 확인한 것들이 아니다. 현재 곳곳에 이러한 사실들을 구명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향토사가들이 소리없이 활동하고 있다. 그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들었던 정보들인 것이다.

혹자는 과연 그러한 작은 사실들을 찾는 작업이 본질적인 학문의 목적일까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되묻고 싶은 의문이 있다. 내포라는 지명의 유래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었을까? 현재까지 이중환의 『백리지』 등 문헌사료에서 찾아낸 몇몇 기록에 의존하여 되풀이하여 언급하면서 내포의 유래와 권역을 의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내포의 지명유래는?

필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내포는 현재의 무한천과 삼교천이 합류하는 지점의 하천 구간을 가리키는 지명이었다. 그곳에 조선 초 충청도 고을의 조세를 받는 조세창고를 두었다가 얼마 후 하류로 이전하였다. 그런 연후에도 이곳 내포를 출입하는 뱃길은 계속 이어졌다. 지금의 삼교천 연안은 백제시대부터도 광범위한 간척사업이 진행되던 곳이었고, 이에 따라 조선후기까지도 지속적으로 간척사업이 이루어졌던 들판이었다. 조선후기 고지도에 ‘주위가 백리에 이르는 넓은 들판’이라고 표기된 것도 이 때문이며, 주변의 고을들은 농경지의 확보를 위하여 앞다투어 간척사업에 힘을 쏟았고, 이러한 연유로 삼교천 연안의 땅은 고을 경계와 멀리 떨어진 홍주, 천안, 덕산의 행정구역으로 편제된 경우가 많았다.



조선후기 고지도 청구요람(삼교천 부분)

이 들판에서 대규모로 생산된 미곡은 뱃길을 통하여 포구에서 반출되었다. 또한 육로를 통해서 지금의 홍성이나 당진, 서산·태안을 왕래하기 위해서는 그 구간의 된고지 나무를 건너야 했다. 한마디로 충남의 서북부를 왕래하기 위해서는, 내포까지 배를 타고 가거나, 그곳의 나무를 건너야 했던 것이다. 지역을 출입하는 창구였던 하천의 이름이, 그곳을 통



하여 왕래했던 고장을 통칭하는 지명으로 자리매김했던 셈이다.

그런데 내포의 지명유래는 추사고택 인근에 잘 알려지지 않은 유적들을 발굴하는 연구 작업과는 성격을 달리 한다. 이러한 연구는 현지에서 광범위하게 탐문을 해서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관련 문헌자료에 대한 전문가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결국 과제마다 접근법을 달리 하여야 하는 셈이다.

그런데 지명유래에 대한 접근은 지역 연구의 시작에 불과하다. 보다 중요한 것은 내포지역을 특징짓는 문화의 주제는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다. 다른 지역에는 없거나 또는 상대력으로 경쟁력이 있는 문화요소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별도로 진행되어야 한다.

내포를 특징짓는 주제들은 무엇일까?

어떤 지역이나 나뭇에 고유한 지역색이 있기 마련이다. 남쪽의 제주도는 신들의 천국이라 한다. 무속에서 언급되는 다양한 신들과 그들을 모시는 신당 때문이다. 검은 현무암으로 둘러싸인 돌담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그렇다면 내포 지역을 특징짓는 역사적 전통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내포불교의 전통과 미학

다소 진부하겠지만, 시대적으로 앞선 주제로는 백제를 대표하는 내포불교의 전통을 거론하고 싶다. 한강 유역에서 웅진과 사비로 수도를 옮긴 이후에 내포는 백제왕조에 있어서 일종의 전초기지과 같은 기능을 담당했다고 알려져 있다. 외부의 적을 방어하는 일차 방어선이면서, 동시에 뱃길을 통한 선진문물 도입창구의 구실을 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태안과 서산의 마애삼존불이나 봉산의 사면석불 등은 그러한 백제시대 국제교류의 전통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이러한 유적들은 시·군지 등에 맡겨두기보다는, 예컨대 '내포불교의 전통과 미학'이라는 주제로 연구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지금은 전하지 않는 중고제 판소리

내포불교에 대한 연구는 그나마 많이 진척된 분야에 속한다. 그러나 조선후기 내포지역에 유행하였던 판소리 중고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된 바가 없다. 판소리가 독립적인 연행 장르로 독립하던 시기에, 전라도 동쪽 지방의 동편제와 서쪽 지방의 서편제와 더불어



경기·충청 일원에서는 중고제 가락이 지배적이었다. 선대의 전설적인 명창 '결성의 최선달'과 '해미의 고수관'의 소리를 이어서, 금강 유역의 김성옥 가게와 서산 지방의 심정순 가게는 중고제 판소리의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지금 생존한 일부 주민들의 기억에도 남아 있고, 그 일부는 유성기 음반으로도 전하고 있으나, 지금은 그 전승이 단절된 상태이다. 최근 일부 국악인과 전문연구자, 그리고 향토사가들의 노력으로 일부 소리가 복원되었고, 옛 명창들의 유적도 확인되고 있다. 충남 일원의 민요와 가락이 흡사하다는 평가를 받는 중고제 소리는 온전하게 복원되어야 할 유산이다.

내부 보부상의 전통과 문화유산

조선후기 상업이 발전하면서 소매 기능과 말단의 수집상 역할을 담당했던 보상과 부상들은 점차 조직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중앙정부에 의하여 상무사라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된다. 다소의 편차는 있으나, 고을 단위로 부상과 보상들을 상무좌·우사로 묶이게 된 것이다.

그런데 내포지역에서는 그 성격을 달리하였다. 예덕상무사라는 이름으로 예산·덕산·당진·면천 등지의 여러 고을을 아우르는 상무사 조직이 출현하였고, 홍주·결성·대흥 고을을 묶는 원흥주육군상무사 조직되었으며, 서천·한산·비인·홍산 등지에서는 특산물 모시를 거래하는 저산팔읍상무사가 나타났다. 현재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록을 신창·아산·온양 등을 묶는 상무사 조직도 있었다. 상무사 관련 유물로는 내포지역의 상무사와 더불어 경상도 창녕의 상무사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창녕을 포함하는 다른 지역의 유물들은 대부분 한 고을 단위로 결성되어 있다. 여러 고을을 단위로 묶었다고 한다면, 모종의 정치권력과의 관계를 상정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내포 보부상들은 한말 변혁기에 정치적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논의는 여기에서 그칠 수밖에 없다. 더 이상의 논의가 가능한 연구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내포교회의 전통

우리나라의 천주교는 1831년 조선교구 창설을 전후한 시기, 중국 동북부를 거쳐 조선의 국경 도시인 의주 - 평양 - 서울로 이어지는 통로를 전파되었다. 그러나 박해가 거듭되면서 정부의 국경 경비가 강화되었고, 새로운 경로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개척된 새로운 루트가 바로 동양 전도의 거점이던 마카오에서 상하이를 거쳐 한반도 중부 해안으로 이어지는 서해 루트였다. 내포는 의주를 통한 서북육상루트에 이어 선교사들의 입국하는 제2



의 비밀 통로로 이용되었다.

더욱이 내포는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주민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천주 신앙 소공동체로의 교회가 창설된 지방이다. 여사울(예산군 신암면 신종리) 출신의 이존창은 서울에서 권일신의 문하생으로 있는 동안에 천주 신앙을 가까이하게 되었고, 그 후 스승의 권고로 고향으로 내려가서 뒷날 내포교회로 통칭되는 여사울 천주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다.

그 영향은 빠른 속도로 내포 각지로 파급되었다. 한국 천주교회 최초의 성직자는 김대건 신부, 두 번째 최양업(崔良業) 신부는 모두 내포 태생이다. 김대건은 지금의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 최양업은 청양군 화성면 농암리 출신이며, 이들과 같이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마카오로 유학갔다가 1838년에 불행히 병으로 사망한 최방제도 홍주에 살던 양반의 자손이었다. 현재 이들에 대한 연구는 교회사 연구자들에 의하여 축적되고 있으며,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성향을 이루고 있다.

사실 종교적 배경에 의하여 추진된 것이기는 하지만, 내포교회사에 대한 연구와 활용은 지역연구의 표준을 제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정 주제에 대한 간단없는 조사를 통하여 역사적 사실들을 확인하면서 정리함과 동시에 활용사업까지 추진하였다. 내포에 대하여 이러한 작업을 시도한 적이 있었을까? 앞에서 언급한 주제들 가운데 몇 가지는 이러한 집요한 작업을 기다리는 연구과제들이다. 이 외에도 내포에는 홍주의병의 사상적 기반을 형성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남당학파의 연원과 사상, 서해안 포구의 상업활동 등 연구자의 손길을 기다리는 주제들이 널려 있다. 연구를 집대성한다는 명목으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묶는 작업에 앞서서, 연구가 진행되는 분야를 주목하는 자세가 필요할 듯하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마을 삼쇠섬 (Samsø Is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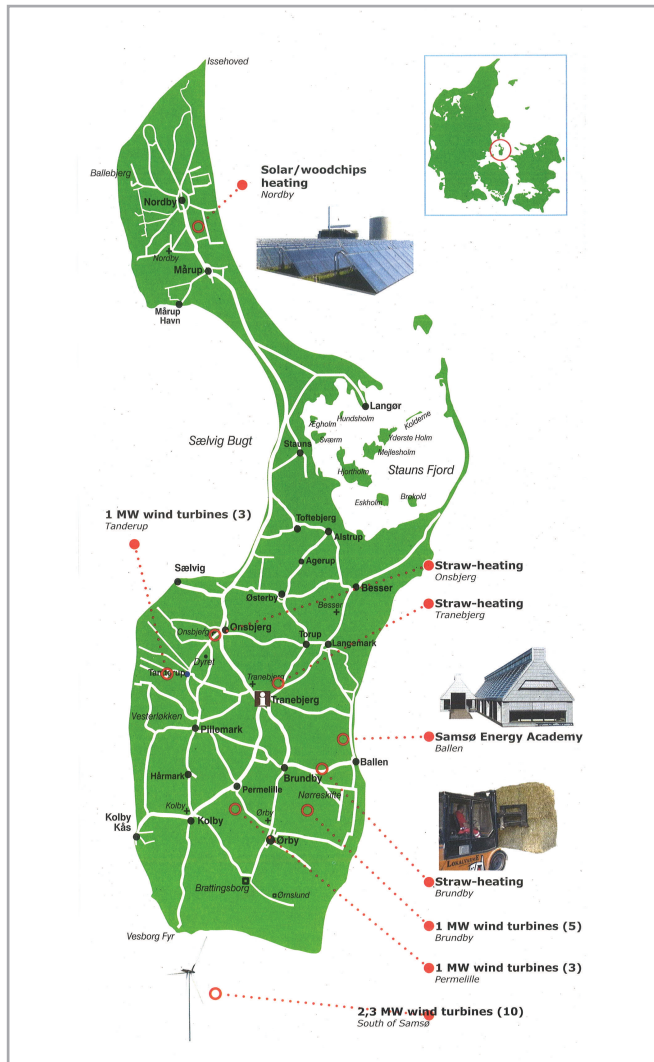
이인희 | 충남발전연구원 환경생태연구부장

1. 지역 개요

덴마크 삼쇠섬은 북유럽 유틀란트반도 동쪽으로 15km 가량 떨어진 카테가트해협에 위치한다. 삼쇠섬에 가기 위해서는 코펜하겐에서 자동차로 1시간 20분 거리에 떨어진 칼룬버그 항에서 하루에 2번 운행하는 카페리를 이용하여야 한다(약 1시간 30분 소요). 총 면적은 114km²이며 그 중 20%는 보존지역이다. 8,100acre가 경작지로 주 경작물은 감자(800acre), berry와 채소류(600acre)이다. 인구는 2013년 현재 3천844명이며 인구밀도는 34명/km²이다. 섬의 길이는 28km이고 가장 넓은 지역은 7km, 가장 좁은 지역은 500m이며, 최고지점은 Ballebjerg로 64m이다. 세계에 널리 알려진 에너지 자립 또는 CO₂ 중립마을이다. 재생에너지 시설로는 3개의 밀짚 열발전소(straw heating plant), 1개의 목재 칩(woodchip)과 태양열 시설, 1MW급의 육상 풍력발전 터빈 11기, 2.3MW급의 해상 풍력발전 터빈 10기가 있다.



〈사진 1〉 칼룬버그 항과 삼쇠섬 행 카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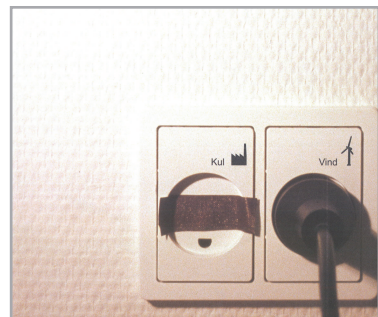
〈그림 1〉 삼쇠섬의 재생에너지 시설 분포

삼쇠섬은 1997년 재생에너지 섬으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10년 만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 자립을 이루었다. 현재 전기의 100%, 난방의 70%를 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하고 있다.

삼쇠섬에는 재생에너지 해결책과 에너지 절약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자체 에너지 사무소(energy office)가 있다. 이러한 삼쇠섬의 재생에너지 이용을 취재하기 위해 Time지 등 많은 언론매체가 방문하였다. 삼쇠섬의 공동체 난방시스템은 밀짚(straw), 태양열 패널, 우드칩(woodchip)과 같은 재생에너지에 기반한다. 삼쇠섬의 해안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1기는 매년 2,000가구가 소비하는 전력을 생산하며, 육상 풍력발전기 1기는 매년 600가구가 소비하는 전력을 생산한다. 10기의 해상 풍력발전기는 삼쇠섬의 교통부에서 소요되는 에너지를 상회하는 전력을 덴마크 본토 전력 그리드에 공급하고 있다.



〈사진 2〉 삼쇠섬 약도와 삼쇠섬 항만 전경



〈사진 3〉 삼쇠섬의 풍력발전 상징 플러그

2. 풍력발전에 의한 전력 자급



〈사진 4〉 삼쇠섬의 육상 풍력발전기

삼쇠섬의 전력은 전통적 방식의 발전소에서 생산되지 않는다. 삼쇠섬에는 11개의 육상 풍력발전기가 있으며,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전체 섬의 수요를 충족한다.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는, 덴마크 본토의 전력 그리드(grid)에서 전력을 수입하며 바람이 불면 잉여 전력을 본토에 공급한다.

덴마크의 중앙에 위치한 삼쇠섬은 1997년 덴마크 재생에너지 섬(Renewable Energy Island)

로 지정되었다. 지정 당시의 목표는 10년 이내에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이었으며, 현재 육상 풍력발전으로 삼쇠섬의 전력수요를 100% 충당하고 있다.

삼쇠섬에 설치된 풍력발전기는 육상 1MW 풍력발전기 11기 중 2기는 주민 450명이 공동 출자한 풍력터빈회사가 소유하고 있는데 일종의 ‘시민 발전소’의 방식으로 따르고 있다. 나머지 육상 풍력발전기 9기는 개인 농장주가 소유하고 있다. 2.3MW급의 해상 풍력발전기 10기는 지자체가 5기를 소유하고 있으며, 개인투자자가 4기, 풍력터빈회사가 1기를 소유하고 있다.



〈사진 5〉 삼쇠섬의 해상 풍력발전기

3. 경작지 부산물을 이용한 난방

삼쇠섬의 큰 마을들(towns)은 여러개의 공동체 난방 시스템(community heating system)에 연결되어 있으며, 이 시스템은 모두가 난방과 온수 공급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이용하고 있다. Nordby와 Mårup사이에는 1,500m² 규모의 태양열 패널을 갖춘 태양열 시설이 입지한다. 이 태양열 시스템



〈사진 6〉 Nordby와 Mårup 사이에 위치한 태양열과 우드칩 열 발전소

으로 에너지 절약과 함께 경제적인 이득도 창출한다.

이러한 공동체 난방 네트워크 이외에, 삼쇠섬의 많은 가구들이 유류 이용 난방을 태양열, 지열, 우드펠릿 보일러로 대체하거나 보조 난방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현재 삼쇠섬에서는 약 70%의 열 생산이 재생에너지로부터 공급된다.

은 지역내 Bratingsborg 숲에서 생산된 우드칩(woodchip)을 원료로한 보일러에 의해 보완된다.

삼쇠섬의 남쪽에는 3개의 공동체 밀짚 열 발전소(heating plant)가 위치하여 Tranebjerg, Onsbjerg, Brundby, Ballen에 난방을 공급한다. 밀짚 열발전소에 원료로 쓰이는 700kg 중량의 밀짚 한 덩이가 300~400리터의 석유를 대체하는 효과를 나타내며, 가격은 10분의 1 수준



〈사진 7〉 삼쇠섬의 밀짚 열발전소

4. 교통 수요를 충족하는 풍력발전

교통부문에서는 삼쇠섬은 전기 자동차와 바이오 연료를 이용한 자동차를 실험하고 있으며, 수소 테크놀로지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가까운 장래에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 자동차에 소요되는 전기를 풍력발전기에 의한 전력 생산으로 충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소 테크놀로지의 진전을 기다리는 대신, 삼쇠섬은 남부 해상에 10개의 대규모 풍력발전기를 설치하여 삼쇠섬의 교통 수요를 보상한다. 매년 이 풍력발전기는 삼쇠섬에서 교통부문에 소요되는 에너지(3개의 카페리가 소비하는 유류 포함)를 상회하는 전력을 본토 전력 그리드에 공급한다. 사실 해상 풍력발전기는 매우 생산성이 높아서 아직 석유 보일러와 같은 비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하는 삼쇠섬의 30%의 난방시스템을 보상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삼쇠섬은 현재 100% 탄소 중립적인 지역이라고 자랑할 수 있다.

5. 에너지 아카데미

2007년 여름 삼쇠 에너지 아카데미가 설립되었다. 동 시설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절약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센터와 전시공간으로 이용된다. 또한 에너지 아카데미는 섬 주민들이 효과적인 단열, 또는 유류 이용 난방의 대체를 위한 무료 상담을 수행하는 삼쇠 에너지 서비스(Energy Service) 체제의 역할도 맡고 있다. 또한 아카데미는 매년 세계 각국에서 재생에너지 섬을 보고 그 경험을 배우기 위해 방문하는 기업, 정치인, 언론인, 학생들을 위한 전시, 워크숍, 세미나들을 개최하고 있다. 현재 12명이 staff로 근무하고 있다.



〈사진 8〉 삼쇠 아카데미 전경과 내부

6. 온실가스 감축

이러한 삼쇠섬의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중요한 결과는 온실가스 중 가장 중요한 이산화탄소 배출의 감축이다. 1997년 삼쇠섬의 에너지 소비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년 45,000톤이었지만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 배출량은 0톤이 되었다. 덴마크 본토 역시 삼쇠섬의 해상 풍력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입함으로써 15,000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보았다. 이러한 대규모의 이산화탄소 감축은 삼쇠섬에 풍력발전기를 대규모로 개발한 결과이며,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이 온실가스 감축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

갑을 관계, 나도 을이다



이도희

충남대학교 초빙교수

- 갑을관계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 고심 ... 소송 대비 증거자료 꼼꼼히 챙겨야(서울경제, 2013.5.28)
- 재계, 5대 윤리지침 선포 ... 왜곡된 ‘甲乙관계’ 청산(아시아경제, 2013.5.28)
-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갑을 나라’ 역사(한겨레, 2013.5.26)
- 공공기관 수퍼갑 제도개선 시급(미디어다음, 2013.5.28)
- 국방부 ‘갑을관계’ 표기 없앤다(폴리스뉴스, 2013.5.15)
- 뚜렷한 갑을관계... “갓다 받쳐야했다”(한겨레, 2013.4.5)
- “갑을관계는 없다” ...더불어 성장 이제는 ‘필수’(국민일보, 2013.3.28)

최근 우리사회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갑을관계’가 아닐까 싶다. 갑을관계..... 나 역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면서 고용계약서에 사인(sign)하였었고, 그 고용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그 계약서를 유심히 살펴보고, 그곳에는 나의 이름 옆에 ‘이하 “을”이라고 한다’로 적혀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도 을이다.

갈등(葛藤)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먼저 찾아보니, “칠패(葛)와 등나무(藤)가 서로 복잡하게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의지나 처지, 이해관계 따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을 일으킴을 이르는 말”, 심리적 어원으로는 “개인의 정서나 동기가 다른 정서나 동기와 모순이 되어 그 표현이 저지되는 현상”, 불교적 어원으로는 “번뇌”와 “망상”을 이르는 말이라 설명하고 있다(daum 어학사전)

따라서 갈등은 인간사 속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의 하나이고, 이러한 갈등을 매일매일 해결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네의 삶이기도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일상을 보내면서 우리는 끊임없는 문제와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갈등의 연속을 경험하고 있다. Peter Drucker는 "조직내에서 진화하는 유일한 것은 무질서, 갈등 및 역효과(malperformance)뿐이다"라고 갈등의 존재 이유를 말하였다. 다만, 그 존재의 이유가 긍정적이어야 함을 담보할 때, 우리의 삶은 좀 더 윤택해질 것이고, 발전지향적이게 될 것이다.

앞서 나의 경우와 같이, ‘갑’과 ‘을’의 사용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계약서에서 이다. 즉, 계약당사자들을 각각 ‘갑’과 ‘을’로 지칭하고, 상대적으로 일과 돈을 주는 높은 위치의 계약자를 ‘갑’, 낮은 위치의 계약자를 ‘을’이라 한다. 그래서 ‘을’은 갑에게 상대적으로 약자가 되고 ‘갑’은 그렇게 강자가 되어, 갑과 을 사이에는 끊임 없는 갈등으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들의 갈등이 그 조직의 진화를 위한 긍정적 효과로 이어진다면 갈등은 존재의 이유가 있다.

그러나 최근 그 약자인 ‘을의 반란’이 시작되었다. 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결국에는 ‘갑을관계’라는 표현이 없어져야 한다고까지 공론화되기에 이르렀다. 이쯤에 ‘을’의 편에서 ‘갑’에 대응하고, ‘갑’과 ‘을’이 상생할 수 있는 ‘갈등관리’ 조직의 역할 중요성을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즉, 갈등관리 및 갈등관리위원회의 존재의 이유는 ‘을’을 돕고, ‘갑’이 제 ‘값’을 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중재 및 조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제도적 차원의 갈등관리를 위하여 2007년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정(대통령령 제19886호, 2007.2.12, 제정, 이하 “규정”)을 출발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본 규정에서는 법률제정의 이유로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과 책무, 갈등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중앙행정기관과 국민이 정책의 입안, 결정, 집행단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을 통해 원만하게 예방하거나 해결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 하고 있다. 또한, 갈등예방 및 해결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규정, 제2장 갈등예방 및 해결의 원칙)

- ①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원칙
- ② 참여와 절차적 정의 원칙
- ③ 이익의 비교형량 원칙
- ④ 정보공개 및 공유의 원칙
- ⑤ 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원칙

따라서, 갑과 을의 갈등관리 및 해결을 위해서는 상기 규정의 내용에서와 같이, 신뢰확보, 주민참여지향, 공익실현 및 지속성장 가능성 제고 등을 담보해야 한다.

갑이 영원한 갑일 수 없고, 을이 영원한 을일 수는 없다. 갑이 을이 되고, 을이 갑이 되는 순환적 공생을 제고한다면, 서로를 위한 상생적 갈등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누구든 을이 될 수 있고, 갑과 을이 맞닥뜨림해야 할 갈등관리는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갑도 을이 될 수 있다.

당진항, 환황해 물류 중심항 도약 날개단다

— 항만운영지원센터 첫 삽…세관·출입국관리·검역 기관 등 입주

당진항이 환황해권 물류 중심 항만으로 도약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당진항 항만운영지원센터’가 6월 11일 첫 삽을 떴다. 충남도에 따르면, 항만운영지원센터 기공식이 이날 당진항 고대관리부두 배후부지에서 주민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항만운영지원센터는 모두 69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4955㎡로 건축된다. 입주 예정 기관은 CIQ(세관·Custom, 출입국관리·Immigration, 검역·Quarantine) 관련 기관, 당진시·평택항만청 출장소 등이다. 또 은행, 우체국, 식당 등 편의시설과 항만 관련 업체 등도 입주해 당진항 이용자들에게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당진항 이용 기업과 단체가 출입국관리나 세관, 검역 등을 받기 위해서는 왕복 74km에 달하는 평택항까지 가야 해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이 컸다. 이에 따라 도는 항만운영센터가 건립돼 본격 가동되면 항만서비스 향상은 물론, 당진항 경쟁력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기공식에서 김홍록 도 건설교통항만국장은 “항만운영지원센터가 건립돼 본격 가동되면 당진항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선순환 경제체계의 구심점으로, 21세기

환황해권 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2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청신호 켜졌다

—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 필요성 인정

평택~부여를 잇는 제2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 당위성을 인정받으며 사업 추진에 탄력이 예상된다.

충남도는 5월 27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에서 제2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당위성이 인정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업은 고속도로 신설 부문에서 제2서해안이 전국에서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침은 새정부 들어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세출구조조정에서 SOC 관련 예산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 사업 착수의 전기를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성과라는 평가다.



이번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의 결과대로 제2서해안 고속도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게 될 경우 내년도 본격적인 사업 착수가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조속한 사업 착수를 위해 주무부처 및 정치권과 연계해 2014년 기본계획 및 설계에 필요한 관련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제2서해안 고속도로는 서해안 고속도로의 지·정체 해소를 위해 경기도 평택시에서 충남도 부여군의 86.3km 구간에 대해 4차로 도로를 신설하는 계획으로, 2008년 수립한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사업으로 선정된데 이어 박근혜 정부의 지역공약으로 채택되는 등 중요성이 인정돼 왔다.

황해경제자유구역사업 활성화 기대

— 첨단제조유통 및 글로벌 체인호텔
등 7개 기업과 투자 MOU 체결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충남 인주지구에 대한 1284억원 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해 사업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5월 21일 첨단제조유통 및 글로벌 체인호텔 등 7개 기업과 충남 인주지구에 대한 1284억 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MOU)를 잇달아 체결했다.

이번에 MOU를 체결한 제조 기업은 지능형 LED, 벽관, 자동차 부품, 건설기계 유통, 플라스틱 연결관 제조 등 독보적인 선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협약대상에는 라마다동탄과 애플트리 등

글로벌 체인호텔 브랜드도 포함돼 그동안 비즈니스 숙박시설 낙후로 어려움을 겪던 충남 서북부 지역 기업인들의 숨통을 트워주는 것은 물론, 외국기업 유치에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투자의향을 보인 이들 기업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풍부하게 위치해 있고, 기반시설 확충계획으로 향후 토지가치 증대가 예상되며, 대중국 수출 인프라 여건이 잘 갖춰진 황해경제자유구역을 투자의 최적지로 판단해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우수한 투자여건이 알려지면서 사실상 신·증설이 어려운 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다수의 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투자유치가 예상된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기업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맞춤형 기업지원 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개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충남도, ‘미래 100년 발전전략’ 심포지엄 개최



충청남도는 충남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6월 17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도의 위상 정립과 지역 간 균형발전 및 미래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미래 100년, 충남의 발전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현황해 시대의 주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충남도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심포지엄에는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 등 각계 전문가와 관계자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충남도청 이전의 의미와 미래 비전’에 관한 기조강연에 이어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은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충남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고, 박양호 전 국토연구원장은 ‘환황해권 시대의 충남 발전방향’을 제언했다. 또 임옥상 미술연구소 대표는 ‘충청남도, 바다로 가자’라는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서는 정순오 한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안희정 지사와 주제 발표자들이 패널로 참석해 토크방식의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발제자와 참석자들간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충남발전연구원, 김홍신 작가 초청 특강 가져



충남발전연구원(원장 박진도)은 6월 14일(금)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 소강당에서 개원 18주년을 맞아 김홍신 작가를 초청, “인생에도 사용설명서가 있다”는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지난 15대·16대 국회의원과 건국대 석좌교수를 지낸 김홍신 작가는 충남 공주 출생으로 현재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충발연 개원기념식과 함께 진행된 이번 특강에서 김 작가는 삶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 등을 진솔하게 들려주었다.

한편, 충발연은 특강 후 연구원 체육대회를 갖고 조직내 화합을 도모하기도 했다.

충남발전연구원, 中 운남성사회과학원과 학술교류 협약 체결



충남발전연구원(원장 박진도)은 중국 운남성사회과학원(원장 런자)과 6월 7일 학술교류와 공동연구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맺은 운남성사회과학원은 1980년에 설립된 운남성 유일의 종합사회과학연구기관

으로서 약300명의 연구원이 동남아연구소, 농촌 발전연구소 등 11개 부설연구소에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향후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공동 연구 및 국제세미나 개최 △연구인력 교류 및 각종 정보 공유 등을 골자로 다양한 협력사업을 모색하게 된다.

한편, 이날 충남도 안희정 지사, 충남도의회 김홍장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 등도 참석해 협약을 축하하며 상호 공동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충발연 박진도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우리의 연구영토가 더욱 넓어질 것”이라면서 “사회·경제·농촌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인적 교류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충남발전연구원, 부탄종합연구원과 행복연구 협약 체결

- 박진도 원장 “행복충남 실현 위한 정책연구에 적극 협력키로”

충남발전연구원(원장 박진도)은 부탄왕국 부탄종합연구원(Center for Bhutan Studies and GNH Research, 원장-다쇼 카르마 우라, Dasho Karma Ura)과 행복지수를 중심으로 한 정책개발연구협약을 4월 25일 부탄종합연구원에서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맺은 부탄종합연구원은 1998년 설립되어 부탄의 국민총행복(GNH), 지역정책개발, 역사문화자원 등 사회과학 중심의 종합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책기관이다.

향후 두 기관은 △행복연구 등 공동연구과제 발굴 및 협력 △연구를 목적으로 한 상호 교류 및 정보 교환 △국제학술세미나 등 공동사업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협약 내용을 이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해 충발연은 ‘충남의 행복지수 개발과 정책방안 연구’를 계기로 부탄의 국민총행복위원회(GNHC) ‘카르마 치팀’ 장관을 비롯한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등을 초청, “행복한 삶: 경제적 가치를 넘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충발연 박진도 원장은 “올해도 행복연구는 계속 되고 있지만 이는 충남만의 관심사가 아닌 새정부 국정과제의 핵심아젠다”라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은 물론, 환경·농촌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교류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원고모집

열린충남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열린충남은 충남에 관한 자유소재(정책제언, 충남여행) 등
참신한 내용과 정보를 「열린마당」에 소개합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www.cdi.re.kr

| 원고작성 | A4용지 4~5매, 휴먼명조, 글자크기 11point, 줄간격 160%(사진포함)

| 보내실곳 | 충남 공주시 금흥동 101 충남발전연구원 기획조정연구실

전화 (041) 840-1123 팩스 (041) 840-1129 E-mail : cdipr@cdi.re.kr